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2017. 3. 30.(목) ~ 3. 31.(금)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계획	1
» 공공기관 청렴도 개요	7
»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15
» 2017년도 청렴도 측정 절차	23
»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29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69
»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발표	
❖ 게임형 청탁금지법의 효과적 교육/한국동서발전(주)	79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탁금지법 운영 사례/한국철도공사	87
» 붙임자료	97
〈붙임 1〉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대상기관	99
〈붙임 2〉 「청렴도 측정」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101
〈붙임 3〉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103
〈붙임 4〉 KT대전인재개발원 건물배치도	104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계획

2017년도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계획

» 목 적

- '17년도 위원회 추진 부패방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 청렴도·시책평가 실무담당자간의 정보교류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7. 3. 30. ~ 3. 31.(1박 2일)
- 장 소 :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 참석 대상

- 261개 기관(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37),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35), 시·도교육청(16), 국·공립대학(11), 공공의료기관(12), 공직유관단체(133)

» 주요 내용

- '17년도 청렴도·시책평가 방향 설명
 - 청렴도 측정모형 등 평가방향 설명
 -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지표 설명
- 기관별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

» 세부시간계획

〈 1일차, 3.30 〉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및 행사 안내	사회자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25 (20')	2016년도 부패방지 분야 유공자 시상식	부위원장
14:25~14:30 (5')	인 사 말 씀	부위원장
14:30~15:20 (5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명 및 질의·응답	방경아 사무관
15:20~15:30 (10')	휴 식	
15:30~16:20 (5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① 청렴조사평가과	윤영국 서기관
16:20~16:40 (20')	② 청렴총괄과	임한나 사무관
16:40~17:10 (30')	③ 청탁금지제도과	정윤정 서기관
17:10~17:30 (20')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발표 - 게임형 청렴교육을 통한 청탁금지법의 효과적 교육 -	한국동서발전(주)
17:30~18:00 (30')	종료(1일차) *숙소사용자 키수령(대강당 등록대)	
18:00~19:00 (60')	저녁식사 *식당운영 : 17:50 ~ 19:00	
19:00~21:00(120')	청렴도·시책평가 관련 자유 질의·응답의 場	희망기관에 한함 장소 별도 안내

〈 2일차, 3.31 〉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07:30~09:30 (120')	아침식사 및 숙소 퇴실(퇴실시 키 반납) *식당운영 : 07:30 ~ 08:30	
09:30~10:00 (3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④ 심사기획과	안진희 주무관
10:00~10:30 (30')	⑤ 행동강령과	김수환 주무관
10:30~11:00 (30')	⑥ 공익심사정책과	이유경 주무관
11:00~11:10 (10')	휴 식	
11:10~11:40 (3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⑦ 청렴연수원	박중하 주무관
11:40~12:00 (20')	⑧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백수경 사무관
12:00~13:00 (60')	점심 식사 *식당운영 : 11:50 ~ 13:00	
13:00~13:30 (3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⑨ 부패영향분석과	이주현 사무관
13:30~14:00 (30')	⑩ 민간협력담당관	박창윤 사무관
14:00~14:30 (30')	⑪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 사무관
14:30~14:45 (15')	⑪-1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손승목 주무관
14:45~15:05 (20')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발표 - 구성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탁금지법 운영 사례 -	한국철도공사
15:05~15:10 (5')	마무리 인사말씀	청렴조사평가과장
15:10~15:25 (15')	참석자 설문지 작성	
15:25~16:15 (50')	청렴도·시책평가 관련 자유 질의·응답의 場	희망기관에 한함
16:15~	워크숍 종료(해산)	

공공기관 청렴도 개요

I 청렴도 측정의 의의

■ 청렴도의 개념적 정의

- ‘청렴도’란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는 ‘행정 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청렴도’를 정의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

■ ‘부패행위’의 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③ ①과 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청렴도 측정의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

- 각급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반부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Ⅱ 청렴도 측정 모형

■ 종합청렴도 모형(2016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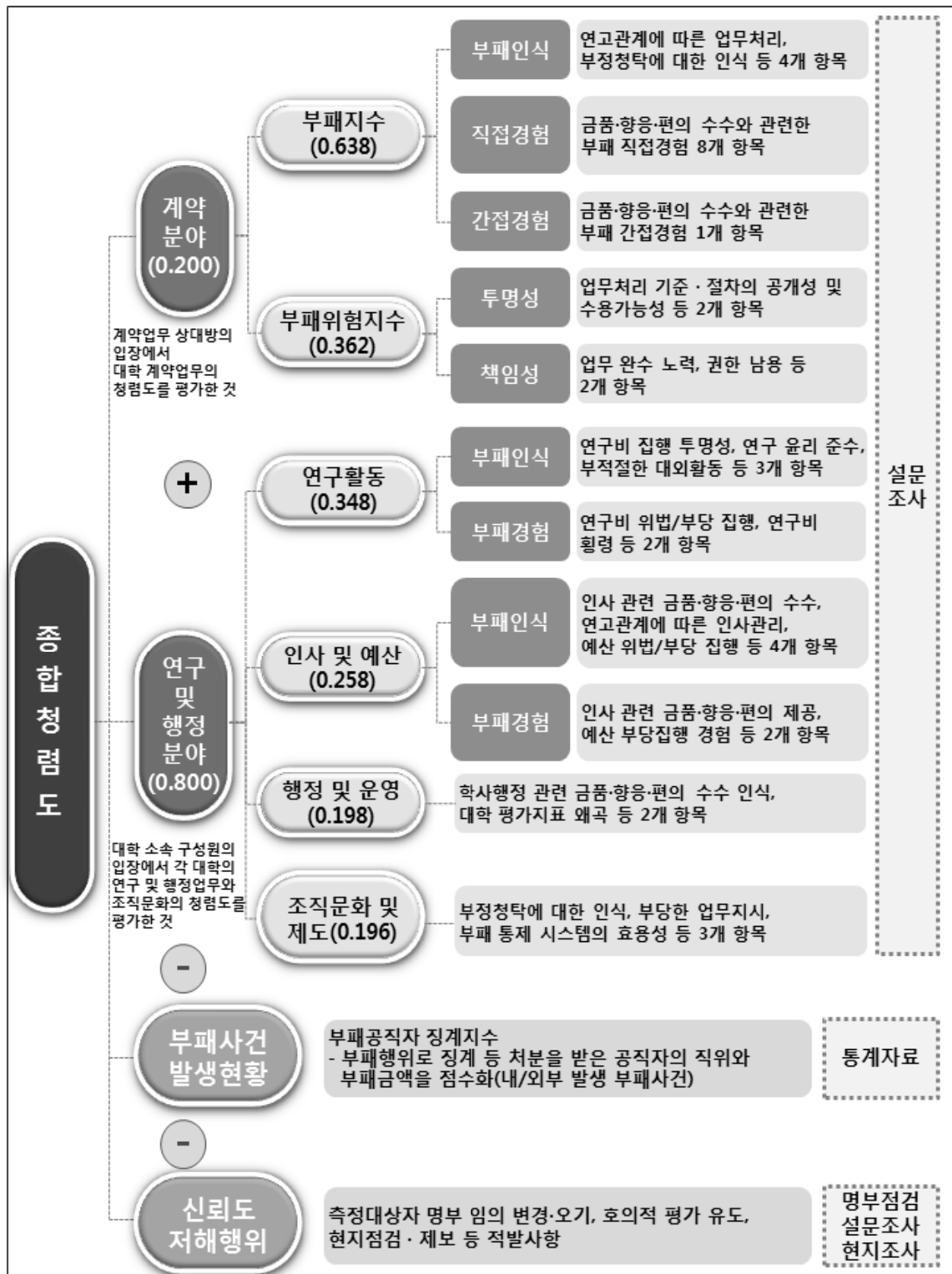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외부청렴도(0.735), 내부청렴도(0.265)가중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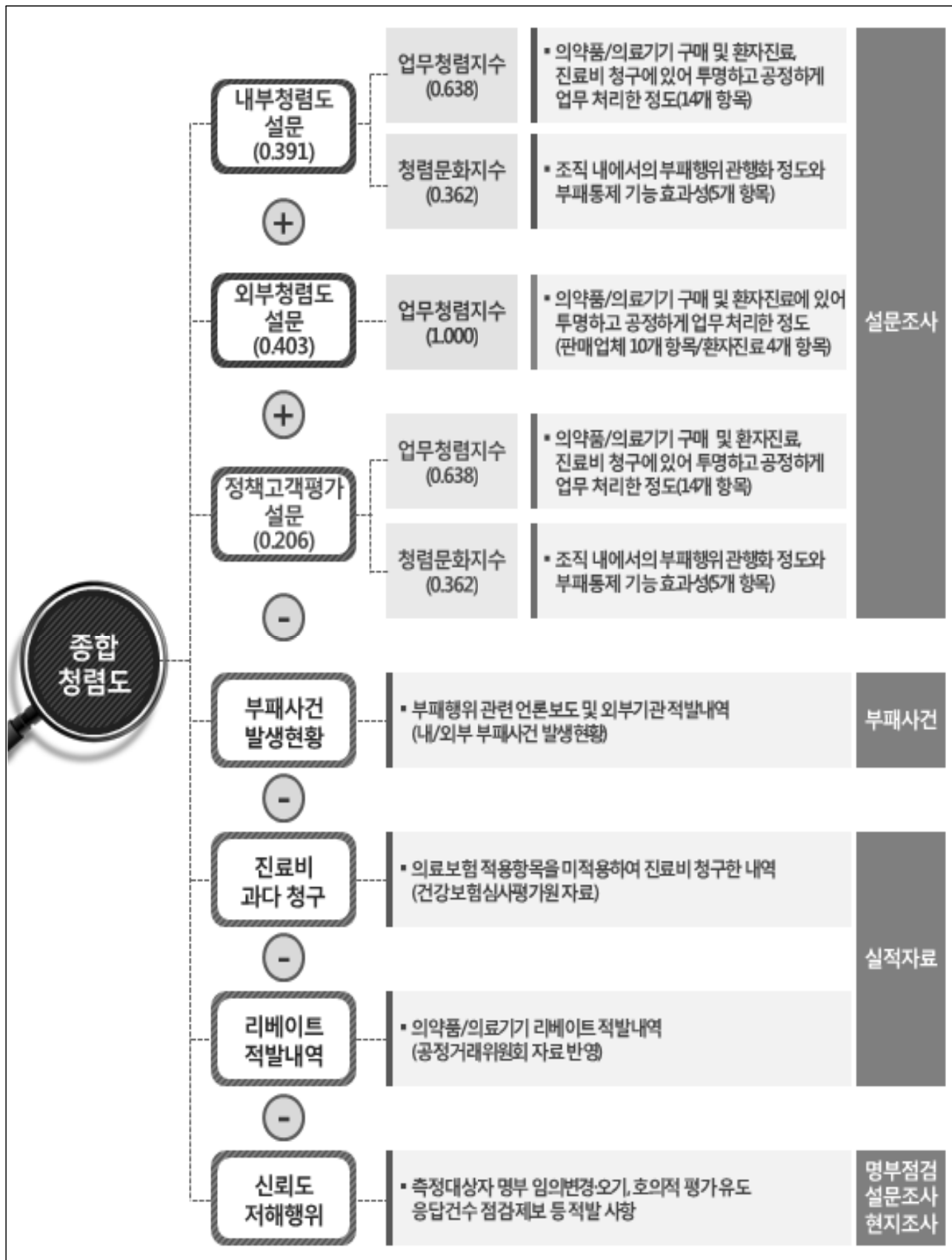
※ 공직유관단체 I, II 유형은 외부청렴도(0.622), 내부청렴도(0.224), 정책고객평가(0.154) 가중합산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가중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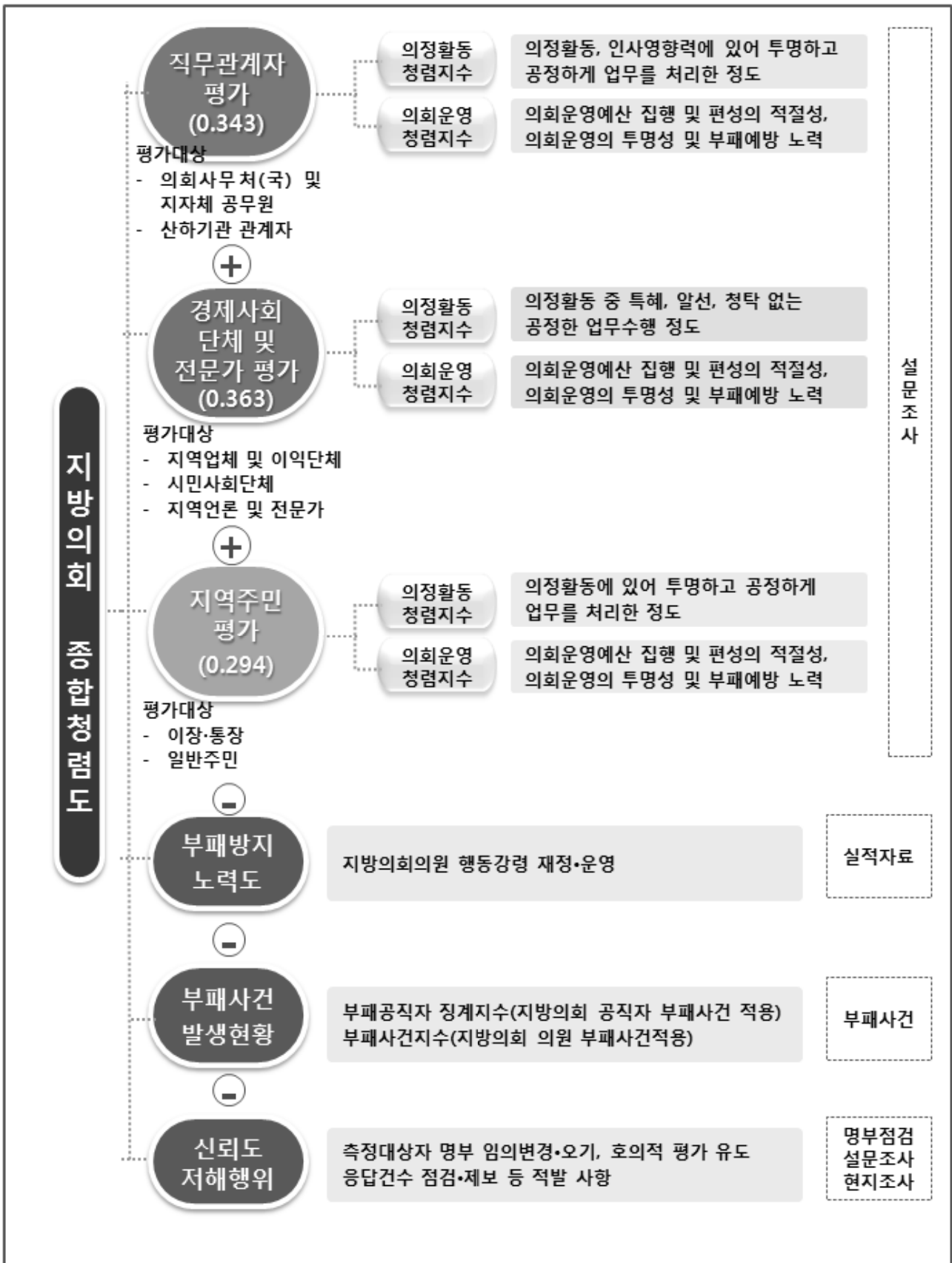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모형(2016년)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모형(2016년)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모형(2016년)



측정 모형 연혁

연 도	측정 모형	측정 기관
'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 내부청렴도 도입	333개

모형 개편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381개
'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478개
'10년		711개
'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 도입 	684개

모형 개편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662개
'13년		699개
'14년		721개
'15년		760개
'16년		733개

※ 국·공립대학 청렴도는 2012년 이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2013년 이후, 지방의회 청렴도는 2013년 이후 특화모형으로 측정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I 2017년도 측정대상기관

- 측정의 타당도 제고를 위해 대상기관 일부 조정
- 전년도(733개)보다 31개 기관 감소한 총 702개 기관 측정(잠정)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16년 측정범위 유지, 41개 기관 측정
- (지방자치단체) '16년 측정범위 유지, 광역(17개), 기초(226개) 측정
- (교육청) 교육청 전수 측정, 지원청은 관내 지원청이 5개 이하인 경우 전수측정, 10개 이상인 경우 3년 주기 측정(73개)
- (공직유관단체) 199개 기관 측정

구분	기 준
측정제외 대상기관	① 청렴도 측정결과, 기관규모, 예산현황 등을 고려 4개 기관 제외 ¹⁾
	② 지방공기업 측정대상기관 조정(10개)
	- 기초지자체 산하 공기업 측정 제외 ²⁾ - 청렴도 결과가 우수한 관광 및 환경 분야 공사공단 측정 제외 ³⁾
측정추가 대상기관	① 최근 3년간 부패공직자 발생현황, 기관 인력 및 예산집행 규모,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여부 등을 고려 3개 기관 추가 ⁴⁾
	②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중 누락된 1개 기관 추가 ⁵⁾

1) 독립기념관, 언론진흥재단, 임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구리농수산물공사, 용인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3)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대구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4) 그랜드코리아레저, 강원랜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기초과학연구원

■ 특화모형 적용 기관

- 광역의회(17개)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권역별로 5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최다 인구 기초의회, 30개) 총 47개 측정
- 국공립대학은 전년과 동일하고 공공의료기관은 전년도 대상기관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개원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의료기관 추가⁶⁾
※ 국공립대학 36개, 공공의료기관 46개 측정

< 2017년 기관유형별 청령도 측정대상기관(안)>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 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지방의회		공공 의료 기관	국공립 대 학
			광역	기초	시도	지원		광역	기초		
16년 측정	733	41	17	226	17	96	209	17	29	45	36
변동	△31	-	-	-	-	△23	△10	-	+1	+1	-
최종대상 (잠정)	702	41	17	226	17	73	199	17	30	46	36

6) 전라북도 진안군 의료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Ⅱ

2017년도 청렴도 측정 추진방향

1

측정업무

■ 신규 측정대상기관 측정업무 발굴

- 신규 측정대상기관은 부패공직자 현황 등 부패사건 현황분석과 기관별 업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패취약업무 발굴

■ 기존 측정대상기관 측정업무 재검토

- 지속적으로 청렴도 점수가 높거나 부패경험이 없는 업무 재검토
- 최근 부패사례 및 부패사건 유형 등을 분석해 신규 측정업무 발굴

2

측정모형

■ 기존 측정모형 보완

- 부패 경험(직접·간접)에 청탁 항목을 신설(청탁여부, 빈도 등)하여 청탁 금지법 실시 이후의 공공부문 청탁 관련 현황 측정
 - ※ '16년 측정에서는 청탁 인식만을 측정하였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부정청탁이 금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필요
- 외국인을 외교부, 공적자금 운용기관, 에너지 공기업 등 국제 거래업무 추진기관의 외부청렴도 설문 대상자에 포함
 - ※ 설문지를 영문으로 번역해 이메일 조사 실시

■ 기관유형별 특화된 측정모형 적용

-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지역업체·주민 등이 평가하는 **특화 모형**을 적용하되, 실적지표 변경여부 검토
 - ※ '16년에 행동강령 운영 실적지표는 대부분 달성(광역100%, 인구 50만 이상 기초 80%)하여 제외 검토
-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각 기관유형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 모형**에 근거하여 측정
 - ※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은 각 유형별로 7월 중 실시계획 별도 시행 예정

3 감점지표

■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행정기관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를 점수화
 - 처분자료 반영 기간('16.7월 ~ '17.6월)내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현황을 점수화
 -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파견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 평가기간 내 징계 등 처분자료 외에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부패사건도 포함
- (부패사건지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행위를 점수화
 - 전년도 반영시점 이후 금년도 평가기간 내 언론보도, 수사기관 보도 자료, 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부패사건을 포함
 - 징계 등 처분현황, 외부적발통보 건 등을 통해 확인한 부패사건도 보완적으로 적용
- 부패사건 발생현황 중 기 감점한 건, 기관 자체적발건은 감점 제외

■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 자체청렴도와 내부 평가(성과급·인사 등) 연계로 청렴도에 대한 과열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한 **측정 명부의 체계적 점검**(9~10월)
 - ※ 오염 행위 발각시 높은 수준의 페널티 부과
- 설문조사 기간 중 **상시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 확인

< 감점 대상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예시) >

구 분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리한 답변 예상자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오기, 대리응답 등
표본 관리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이메일, 공지, 교육, 간담회를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 청렴도 측정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참조 • 내부청렴도 점수를 일반직원 성과지표·성과급에 반영
부패사건현황 자료 제출 누락, 허위사실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사건현황 자료제출 누락 • 부패사건현황 자료 확인 시 허위사실 제출

Ⅲ

향후 추진일정

■ 기관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17. 3~5월)

- 측정대상기관 선정 및 측정대상업무 관련 기관 의견 수렴(3월)
- 측정모형 및 설문지 설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4~5월)

■ '17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7. 6월말)

- 측정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대상업무 등 확정
- 명부작성 기준,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 제출 기준 안내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확인('17. 7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명부, 부패공직자 자료 수령
- 제출명부 오기, 누락, 오염여부 등 점검

■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17. 7~11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실시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여부, 표본관리행위 등 점검

■ '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17. 12월)

- 측정 결과 종합 분석 및 보도자료 제공

2017년도 청렴도 측정 절차

I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선정

■ 측정대상업무 선정 기준

- 측정대상업무 선정은 외부청렴도에서 고려
- ① 대민·대기관 업무일 것, ② 충분한 측정대상자 표본 확보가 가능할 것, ③ 해당 기관과 측정대상자가 업무 접촉이 있을 것, ④ 기관의 대표적 업무, 부패개연성 있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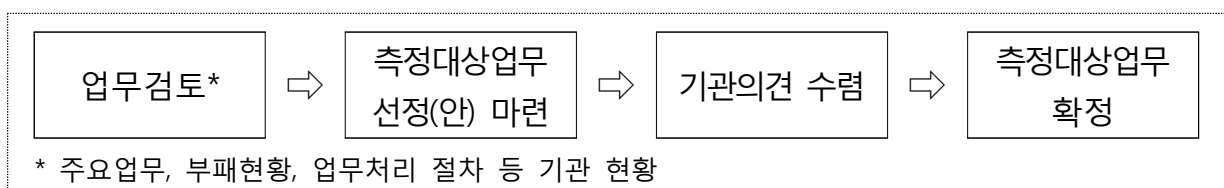
■ 측정대상업무 유지 및 변경 기준

- (유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낮거나, 부패사건 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업무, 관련 예산 규모가 크거나, 해당기관과 접촉하는 국민의 규모가 커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업무
- (변경) 표본조사가 곤란한 업무 및 소관기관이 변경된 업무 등
※ 표본조사가 어렵더라도 기관의 핵심업무인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측정 실시

■ 측정대상업무 선정 절차

- 측정대상업무 선정은 매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며, 확정된 측정 대상 업무는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통해 각급 기관에 통보
- 측정대상업무는 각급 기관의 주요기능, 언론에 보도된 부패사건, 대민·대기관 업무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측정대상업무 선정 절차>



Ⅱ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 측정대상자 및 명부 제출 범위

- (법적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의 자료 등 제출 요구권에 따라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외부청렴도) 당해연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측정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 또는 담당자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 '17년 청렴도 측정의 경우 '16. 7. 1일부터 '17. 6. 30일까지
- (내부청렴도) 당해연도 6월 30일 현재 측정대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으로 본부, 소속기관, 지방관서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정책고객평가) 당해연도 6월 30일 현재 측정대상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출입기자, 보좌관, 학계 등), 업무관계자(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 명부작성시 주의사항

- 측정대상자 명부는 각 기관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실시계획의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을 숙지
 - 부패공직자 처분자료, 감사수감내역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징계, 훈계주의 관리대장, 징계의결서, 처분요구서 등은 권익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제출
- ※ (참고) '16년 명부 제출서식 : 하나의 엑셀파일에 시트별로 작성

1. 외부청렴도 : 1-1 외부청렴도 대상자 명부 표지, 1-2 외부청렴도 민원인, 1-3 외부청렴도 계약입찰참가자 명부
2. 내부청렴도 : 2-1직원명부, 2-2정원표
3. 정책고객평가 : 3-1전문가 명부, 3-2업무관계자 명단, 3-3전입직원 명부
4. 부패사건 현황 : 4-1부패행위 징계목록, 4-2주의 등 처분목록, 4-3감사수감내역, 4-4감사처분목록

Ⅲ 청렴도 측정 실시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확인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명부, 부패공직자 관련 자료 등 수령
- 제출명부 상의 오기, 누락, 중복여부 등을 검증

■ 청렴도 측정 실시

- 외부청렴도는 기관 및 민원인 규모, 내부청렴도는 정원, 정책고객평가는 세부 정책고객 유형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규모결정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실시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는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되며, 전화조사로 진행
 - 내부청렴도는 측정대상자를 본부·소속기관별, 직급별 구성비에 따라 우선할당 후 표본추출하여 온라인(모바일, 이메일) 설문조사로 진행
 - 정책고객평가는 측정대상자를 유형별로 할당 한 후 표본추출해 전화 설문을 통해 측정 실시

■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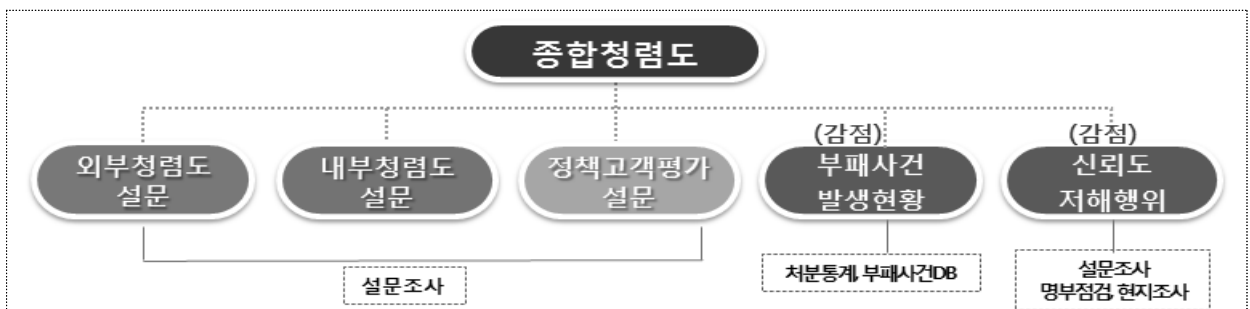
-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 및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표본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점검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시 제재기준에 따라 감점 등의 조치
- 현지점검 대상기관은 권익위에 제출한 측정대상자 명부, 부패공직자 관련 자료, 징계대장,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대장, 기관 인트라넷 및 시스템 열람 권한 등을 사전에 준비

IV 청렴도 측정 결과 집계 및 발표

■ 점수집계 방법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내부·정책고객평가 설문점수에서 부패사건 발생 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10점 만점으로 산출
 - 외부청렴도는 외부청렴도 설문점수에서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반영하여 산출(내부청렴도 동일)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은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지수로 구성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공직자의 직위·기관의 총 부패금액, 정원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 (부패사건지수) 전문가 평가심의회에서 평가한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 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각 항목을 점수화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은 호의적 평가 유도 행위에 대한 설문응답, 표본 관리행위 등이 확인된 건을 반영

<종합청렴도 점수화 방식>



■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 매년 12월 종합청렴도 및 외부·내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각 영역별 점수 발표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I 부패방지 시책 평가 개요

■ 개 념

-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평가 소지표에 대한 1년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수립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발하여 2002년 최초 실시

■ 추진 목적

-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청렴도 측정은 각급 기관의 업무별 부패현황 진단이 목적, 시책평가는 기관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견인이 목적

■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대상 기관

- 중앙,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02년) 기초지자체(‘09년), 국공립대학(‘14년), 공공의료기관(‘15년) 등 평가

< ‘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부처 위원회	청	소규모 기관	광역	기초				
266	22	14	7	17	24	17	11	12	142

Ⅱ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기본 방향

- (대상기관) 청렴도 지속적 상위 기관을 시책 평가 기관에서 제외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을 포함시켜 **청렴도와 시책평가 간 연계 강화**
- (평가지표) 부정청탁금지, 청렴교육 의무화 등 **변화된 청렴정책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집중 추진 유도**
- (우수시책) 타 기관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반부패 시책을 개발**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우수 반부패 사례를 공유·확산**

<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방향 >

구 분	내용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연속성, 기존 기관의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 틀을 유지하되 청렴도 상위기관은 제외하고, 하위기관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 - '16년 청렴도 4, 5등급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추가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금지 제도운영, 청렴교육 의무화 등 금년도 청렴 정책의 중점사항을 새롭게 반영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수립과 취약분야 제도개선 실적,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여부를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 확대 ■ 기타,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표의 큰 틀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 이행해야 할 소지표 수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 예정
결과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사례를 공공부문 및 해외 정책전수로 확산 ■ 우수 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Ⅲ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1. 평가 대상 기관

■ 선정 기준

○ 시책평가의 연속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예년의 대상기준 적용

※ 전 중앙행정기관, 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인구 50만이상), 국공립대(신입생3천명), 공공의료(국공립 대학병원), 공직유관단체(150명, 3천억)

○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청렴도 상위기관을 제외하고, 청렴도 하위기관을 추가

< 평가 대상기관 선정 고려요인 >

▶ 대상기관 제외 기준

- 청렴도 2년 연속('15~'16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 2년간('14.7.1~'16.6.30) 부패사건 발생이 없었던 기관

▶ 대상기관 추가 기준

- '16년 청렴도 '4, 5등급' 대상 기관으로
- 기초지자체는 인구 30만명, 공직유관단체는 임직원수 150명 이상 기관

< 시책평가 제외 및 추가 기관 >

구분	제외(31개)	추가(25개)
중앙부처	통계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병무청, 여성가족부, 통일부(6)	
지자체 (교육포함)	전주시, 인천 부평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3)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김포시, 양산시, 구미시, 광주 북구, 대구 수성구, 부산진구, 부산 북구, 도봉구, 동작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13)
공직 유관단체	건강보험공단, 국토정보공사, 조폐공사, 남동발전,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감정원, 한국전력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장애인고용공단,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군인공제회, 소방산업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광해관리공단, 원자력환경공단,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시시설관리공단, 광주환경공단, 대구환경공단(22)	국제방송교류재단, 건설기술연구원, 문화예술위원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우편사업진흥원, 원자력연구원, 청소년활동진흥원, 한의학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화학연구원(12)

■ 대상 기관 (261개)

- (중앙행정기관) 기존 3개 그룹에서 부·처·위원회(중앙1, 24개), 청(중앙2, 13개) 2개 그룹으로 재편성하여 평가
 - ※ 제외기관(6) : 통계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병무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35개)로 편성
 - ※ 추가기관(13) :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김포시, 양산시, 구미시 등
 - 제외기관(2) : 전주시, 인천 부평구
- (교육자치단체) 시·도교육청(16개)
 - ※ 제외기관(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11개)
- (공공의료) 국공립대학병원·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12개)
- (공직유관단체) 예년의 대상기준에서 청렴도 상위기관을 제외하고, 하위기관을 추가(133개)
 - ※ 추가기관(13) : 국제방송교류재단, 건설기술연구원, 문화예술위원회 등(12개),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통합)
 - 제외기관(22) : 건강보험공단, 국토정보공사, 조폐공사, 남동발전 등

< 2017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광역	기초				
16년	266	43	17	24	17	11	12	142
변동	△5	△6	-	+11	△1	-	-	△9
최종대상	261	37	17	35	16	11	12	133

2.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 각급기관들의 지속적 노력 유도를 위해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16년 지표(붙임2)의 체계 유지
 - ※ 신규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별도 그룹화하여 절대 평가 등 다양한 방식 검토
- 변화된 청렴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지표를 변경
 - (청탁금지 제도운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적,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우수 변화사례 등
 - (청렴교육 내실화) 청렴교육 강사 양성 실적, 청렴교육 강사 활용 실적,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실적,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 등
 - (반부패 수범사례) 반부패 시책개발·타 기관 확산

■ 평가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17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권익위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시책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평가
 - ※ 제로미시시스템을 통해 실적 보고서, 증빙자료, 이의제기 등 입력
-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각 기관 청렴노력 견인
 - 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지점검
 -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추진 실적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 허위 실적 자료 제출 시 등급 하향
 - ※ 시책평가 결과 공개시 허위 자료 제출 사실 공표

3.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 평가 상위기관에 대한 기관 및 담당자 포상
-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해외 반부패 전문기관 교육훈련 기회 제공
 - ※ '16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청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소재 IACA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훈련 실시 예정(5월)

IV 연간 추진 일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4월 중순)

- 평가대상기관, 평가 지표 최종안, 보고서 제출 양식 등 송부

■ 기관 자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17. 4월말)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7. 1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평가('17.11~12월)

※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 평가결과 발표 및 언론 공표('18.1월)

별첨1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37개 기관
○ 부·처·위원회(2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무조정실	13	농림축산식품부
2	국가보훈처	14	산업통상자원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15	보건복지부
4	공정거래위원회	16	환경부
5	기획재정부	17	고용노동부
6	미래창조과학부	18	국토교통부
7	교육부	19	해양수산부
8	외교부	20	국민안전처
9	법무부	21	법제처
10	국방부	22	방송통신위원회
11	행정자치부	23	금융위원회
12	문화체육관광부	24	원자력안전위원회

○ 청(13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세청	8	농촌진흥청
2	관세청	9	중소기업청
3	조달청	10	특허청
4	검찰청	11	기상청
5	방위사업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	경찰청	13	새만금개발청
7	문화재청		

■ 광역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10	충청북도
2	부산광역시	11	충청남도
3	대구광역시	12	전라북도
4	인천광역시	13	전라남도
5	광주광역시	14	경상북도
6	대전광역시	15	경상남도
7	울산광역시	16	제주특별자치도
8	경기도	17	세종특별자치시
9	강원도		

■ 기초자치단체 : 35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노원구	19	경기도 안양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20	경기도 부천시
3	서울특별시 관악구	21	경기도 안산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22	경기도 고양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3	경기도 남양주시
6	서울특별시 은평구	24	경기도 용인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25	경기도 화성시
8	서울특별시 도봉구	26	경기도 광주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7	경기도 김포시
10	부산광역시 북구	28	강원도 원주시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29	충청북도 청주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30	충청남도 천안시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31	경상북도 포항시
14	인천광역시 서구	32	경상북도 구미시
15	인천광역시 남구	33	경상남도 창원시
16	광주광역시 북구	34	경상남도 김해시
17	경기도 수원시	35	경상남도 양산시
18	경기도 성남시		

■ 시·도 교육청 : 16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교육청	9	강원도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10	충청북도교육청
3	대구광역시교육청	11	충청남도교육청
4	인천광역시교육청	12	전라북도교육청
5	광주광역시교육청	13	전라남도교육청
6	대전광역시교육청	14	경상북도교육청
7	울산광역시교육청	15	경상남도교육청
8	경기도교육청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국·공립대학 : 11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대학교	7	공주대학교
2	부산대학교	8	강원대학교
3	부경대학교	9	충북대학교
4	경북대학교	10	전북대학교
5	전남대학교	11	경상대학교
6	충남대학교		

■ 공공의료기관 : 1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대학교병원	7	전남대학교병원
2	부산대학교병원	8	전북대학교병원
3	경북대학교병원	9	강원대학교병원
4	경상대학교병원	10	제주대학교병원
5	충남대학교병원	11	국립암센터
6	충북대학교병원	12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직유관단체 : 133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19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철도공사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한국전력공사	12	한국도로공사
3	한국수력원자력(주)	13	한국수자원공사
4	서울메트로	14	부산교통공사
5	중소기업은행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	한국토지주택공사	16	대한적십자사
7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7	한국가스공사
8	근로복지공단	18	한전KPS(주)
9	한국농어촌공사	19	한국산업은행
10	국민연금공단		

○ 공공기관 II 그룹(31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전기안전공사	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한국은행	18	교통안전공단
3	한국중부발전(주)	19	한국가스안전공사
4	신용보증기금	20	인천교통공사
5	한국동서발전(주)	21	국립공원관리공단
6	한국남부발전(주)	22	한국산업인력공단
7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23	기술보증기금
8	한국환경공단	24	한국자산관리공사
9	한국서부발전(주)	25	국방과학연구소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	도로교통공단	27	한전KDN(주)
12	금융감독원	28	한국전력기술
13	한국공항공사	29	인천국제공항공사
14	한국철도시설공단	3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5	한국지역난방공사	3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6	한국석유공사		

○ 공공기관 III 그룹(2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수출입은행	13	한국광물자원공사
2	한국마사회	14	국방기술품질원
3	중소기업진흥공단	15	한국주택금융공사
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6	한국산업단지공단
5	한국거래소	17	한국에너지공단
6	서울주택도시공사	18	한국예탁결제원
7	한국관광공사	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8	산림조합중앙회	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1	강원랜드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1	공무원연금공단		
12	한국무역보험공사		

○ 공공기관 IV 그룹(2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부산환경공단	13	한국소비자원
2	인천환경공단	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경기도시공사	15	대한석탄공사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6	한국정보화진흥원
5	주택도시보증공사	17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6	중소기업중앙회	18	한국국제협력단
7	부산시설공단	19	선박안전기술공단
8	한국석유관리원	20	(주)한국건설관리공사
9	울산시설공단	2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0	한국연구재단	22	국제방송교류재단
11	사회보장정보원	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	한국인터넷진흥원	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공기관 V 그룹(37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	대구도시공사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	전남개발공사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3	우체국물류지원단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	대전도시공사	26	대한체육회
8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한국장학재단	28	한국해운조합
10	해양환경관리공단	29	인천도시공사
11	한국고용정보원	3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2	부산도시공사	31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3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32	한국원자력연구원
14	한국시설안전공단	33	한국화학연구원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4	한국한의학연구원
16	한국콘텐츠진흥원	3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9	부산항만공사		

별첨2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체계

평가 부문	평가 영역 (가중치)	단위 과제 (가중치)	소지표 (가점)
A. 계 획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0.10)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 (0.20)	1-1. 계획의 이행 여부(0.15) 1-2. 청렴정책 참여 확대(0.55)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0.30)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는 1-1 (0.40), 1-2 (0.60)	7(1)
	2. 부패위험 제거 개선 (0.20)	2-1. 부패취약분야 개선(0.45)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0.30) 2-3. 부패행위 처벌 강화(0.25)	8(1)
	3. 청렴문화 정착 (0.25)	3-1. 청탁금지 제도 운영(0.30) 3-2. 청렴교육 내실화(0.30) 3-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0.40)	16(4)
C. 성 과 · 확 산	1. 청렴개선 효과 (0.10)	1-1.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0.60) 1-2. 청렴도 측정 점수(0.30) 1-3.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0.10)	3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0.15)	2-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0.20) 2-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0.80)	4(2)
감점		1. 부패사건 외부적발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단위 과제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배점	100																																										
평가 방법	○ 기관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100)																																														
	<div><div>- 기관의 자체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 수립 평가</div><div>- 단순 과제 나열식, 평가지표 열거식 계획이 아닌 기관별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여부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평가</div><div>- 금년도 시책평가 단위과제별 소지표의 개수를 고려할 때 <u>최소 20개 이상</u>의 세부 정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div></div>																																														
	<div>< 계획 수립 시 중점 고려 사항 ></div> <div><div><div>● 청렴 추진체계 구축 : 기관장 주도 청렴 관련 고위직 협의체 구축,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참여 여부, 청렴 시민감사관 등 거버넌스 운영 등</div><div>● 기관별 맞춤형 계획 수립 : 전년도 청렴도 측정, 시책평가 등 결과 분석과 정책여건에 기초한 취약분야 도출 및 개선 방향 마련</div><div>● 시책평가 과제 이행계획 수립 : 청탁금지 제도운영, 기관별 행동강령 내실화, 수범사례 개발·확산,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청렴교육 등 평가과제별 체계적 계획 수립</div><div>● 청렴 노력을 통한 국정과제 이행 : 국가보조금 등 각종 예산 집행 과정의 누수 방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청렴관련 사항 공개</div></div></div>																																														
	<table><tr><th>세부 평가기준</th><th>배점</th><th>매우 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r><tr><td>①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td><td>20</td><td>20</td><td>16</td><td>12</td><td>8</td></tr><tr><td>② 고위직의 청렴성·책임성 확보방안 마련</td><td>20</td><td>20</td><td>16</td><td>12</td><td>8</td></tr><tr><td>③ 기관장, 고위직 및 구성원 참여</td><td>15</td><td>15</td><td>12</td><td>9</td><td>6</td></tr><tr><td>④ 국정과제 관련 사항 포함</td><td>15</td><td>15</td><td>12</td><td>9</td><td>6</td></tr><tr><td>⑤ 목표 대비 계획내용의 내실화·구체성 정도</td><td>20</td><td>20</td><td>16</td><td>12</td><td>8</td></tr><tr><td>⑥ 추진일정의 체계성 및 집행의 현실성</td><td>10</td><td>10</td><td>8</td><td>6</td><td>4</td></tr></table>						세부 평가기준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①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20	20	16	12	8	② 고위직의 청렴성·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20	20	16	12	8	③ 기관장, 고위직 및 구성원 참여	15	15	12	9	6	④ 국정과제 관련 사항 포함	15	15	12	9	6	⑤ 목표 대비 계획내용의 내실화·구체성 정도	20	20	16	12	8	⑥ 추진일정의 체계성 및 집행의 현실성	10	10	8	6
세부 평가기준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①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20	20	16	12	8																																										
② 고위직의 청렴성·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20	20	16	12	8																																										
③ 기관장, 고위직 및 구성원 참여	15	15	12	9	6																																										
④ 국정과제 관련 사항 포함	15	15	12	9	6																																										
⑤ 목표 대비 계획내용의 내실화·구체성 정도	20	20	16	12	8																																										
⑥ 추진일정의 체계성 및 집행의 현실성	10	10	8	6	4																																										
비고	<div><div>- 17.4.30.까지 10장 이내로 작성하여 공문 제출(분량 초과 시 감점)</div><div>- 기관별 채점(권익위 총괄담당자, 외부전문가) → 표준화 →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종 점수 부여로 기관간 편차 확대 방지 예정</div></div>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계획의 이행 여부		배 점	100								
평가 방법	<div>○ 부패방지 추진계획 이행여부 평가</div> <div><div>- 기관 실정에 맞는 청렴 추진계획 수립 시 계획한 내용들을 계획한 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 평가(기관이 계산하여 제출한 백분율(소수 첫째자리 반올림)을 점수화)</div><div>- 단위과제가 20개 미만일 경우 건당 5점 감점(예: 단위과제 15건: 전부 이행 시 75점)</div><div>- 대부분의 기관이 추진전략->추진과제->세부 추진전략(과제)으로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세부추진전략을 이행</div><div>- 기재출한 <u>추진계획의 단위과제 및 세부과제명과 동일하게 목록을 작성</u>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련 사항에 대한 <u>공문번호 전부 기재</u></div></div> <div>※평가예시) 추진계획 제출 시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계획이행여부를 제출할 경우</div> <table><tr><th colspan="2">추진계획 제출</th><th colspan="2">계획 이행 여부 제출</th></tr><tr><td><div>청렴문화 정착</div><div><div>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div><div>1. 행동강령 금품수수금지 금액한도 개정</div><div>2.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제한 및 신고의무 개정</div><div>3. 청탁금지법 교육</div><div>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div><div>1. 고위직 간담회 개최</div><div>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div></div></td><td><div>청렴문화 정착</div><div><div>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div><div>1.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div><div>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div><div>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div><div>1. 고위직 간담회 개최</div><div>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div></div></td><td><div>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div><div><div>①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div><div>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div><div>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div><div>②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div><div>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div><div>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div></div></td><td><div>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div><div><div>①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div><div>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div><div>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div><div>②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div><div>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div><div>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div></div></td></tr></table> <div>-> 총 9개의 과제 제출</div> <div>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관련 과제 중 추진계획 제출시 과제 2개를 제출했지만 계획이행여부에서는 행동강령 개정이라는 1개의 계획 이행으로 통합하여 제출하여 8개의 과제로 평가</div>				추진계획 제출		계획 이행 여부 제출		<div>청렴문화 정착</div> <div><div>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div><div>1. 행동강령 금품수수금지 금액한도 개정</div><div>2.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제한 및 신고의무 개정</div><div>3. 청탁금지법 교육</div><div>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div><div>1. 고위직 간담회 개최</div><div>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div></div>	<div>청렴문화 정착</div> <div><div>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div><div>1.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div><div>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div><div>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div><div>1. 고위직 간담회 개최</div><div>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div></div>	<div>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div> <div><div>①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div><div>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div><div>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div><div>②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div><div>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div><div>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div></div>	<div>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div> <div><div>①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div><div>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div><div>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div><div>②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div><div>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div><div>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div></div>
	추진계획 제출		계획 이행 여부 제출									
<div>청렴문화 정착</div> <div><div>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div><div>1. 행동강령 금품수수금지 금액한도 개정</div><div>2.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제한 및 신고의무 개정</div><div>3. 청탁금지법 교육</div><div>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div><div>1. 고위직 간담회 개최</div><div>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div></div>	<div>청렴문화 정착</div> <div><div>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div><div>1.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div><div>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div><div>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div><div>1. 고위직 간담회 개최</div><div>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div></div>	<div>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div> <div><div>①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div><div>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div><div>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div><div>②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div><div>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div><div>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div></div>	<div>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div> <div><div>①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div><div>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div><div>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div><div>②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div><div>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div><div>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div></div>									
비고	<div>- 추진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등을 비고란에 명시</div> <div>-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과제를 통합하였거나 권익위의 지표변경 사유 등으로 이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지라도 계획이행여부 제출 시 사유 기재 필요</div>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청렴리더십 강화(30)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점수를 반영 (‘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 결과 자료 이용)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항목의 점수를 반영 (‘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 결과 자료 이용)			
	②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활성화(50)			
	▷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지역본부,지사 등)이 있는 경우			
	-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20)			
	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여부(30)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평가대상기관 선정 기준			5	
- 대상 기관수, 주요 산하기관·부패발생 기관·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관 포함 여부 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는지 여부 등				
② 평가항목 구성			15	
- 기관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구성 여부				
- 제도개선 과제 등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노력 포함 여부 등을 평가				
③ 평가결과 활용(인센티브 부여 등)			10	
※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존 성과평가에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				
· 중앙행정기관은 산하기관, 관련 협회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하는 경우 인정. 다만, 산하기관 등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지방청 등)에 대한 평가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는 권역내 기초자치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인정				
·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사립학교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하는 경우 인정				
· 공직유관단체는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 등)에 대한 평가도 인정. 다만, 산하기관이 있는 경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높이 평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100								
평가 방법	<div>▷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지역본부,지사 등)이 없는 기관의 경우</div> <div>-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50)</div> <div>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div> <div>③ 청렴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20)</div> <div>- 제도 유무 및 운영 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div> <div><div>《 인센티브 평가 기준(예시) 》</div><div><div>▪ 청렴업무 전담팀 구성(반부패·청렴 명칭 명시)</div><div>▪ 청렴업무 전담팀의 감사실내 위상</div><div>▪ 인사가점 등 우대 조치</div><div>▪ 해외 연수기회 부여</div></div></div> <div><table><tr><td>우수</td><td>보 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20</td><td>15</td><td>10</td><td>5</td></tr></table></div> <div>※ 인센티브 제도가 없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div>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20	15	10	5
	우수	보 통	미흡	매우미흡								
20	15	10	5									
비고	- (②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활성화) 전체기관 공통지표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 점	100																																						
평가 방법	①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횟수(40)																																										
	- 회의 운영횟수 평가																																										
	<table><tr><td>횟수</td><td>1회</td><td>2회</td><td>3회</td><td>4회 이상</td></tr><tr><td>배점</td><td>10</td><td>20</td><td>30</td><td>40</td></tr></table>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배점	10	20	30	40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배점	10	20	30	40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활동 결과 또는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의 보고·청취와 협조·애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 등을 말함(분과별 회의가 있는 경우는 쏘 분과가 각각 1회씩 회의한 경우 총 1회로 인정) / 화상회의 인정, 서면회의 불인정																																										
	※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제도 운영 시 각 제도별로 회의 횟수를 모두 충족하거나, 직무 실적이 있는 제도의 회의 횟수를 반영																																										
	※ 감사 참여, 자문의뢰, 위촉식, 모니터링 참관,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은 운영 횟수에 미포함, 2개 기관 이상 협업 회의는 1개 기관만 실적 인정																																										
	②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실적(60)																																										
	-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수용·반영 실적 등 평가																																										
<table><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2">배점</th></tr><tr><td rowspan="5">공통</td><td>● 일반의견 제시</td><td></td><td>20</td><td rowspan="5">유 리 한 점 수 중 하 나 합 산</td></tr><tr><td>● 감사 참여(동일 감사 건은 1회로 인정) (1회 10점, 2회 15점, 3회 20점, 4회 이상 30점)</td><td></td><td>30</td></tr><tr><td>● 사회적 이슈(언론보도, 집단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에 대한 특별 감사 요구 (그 외 특별감사 요구는 20점)</td><td></td><td>30</td></tr><tr><td>●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하여 감사 실시 (그 외 특별감사 실시는 35점)</td><td></td><td>45</td></tr><tr><td>●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이 참여하여 감사 실시</td><td></td><td>55</td></tr><tr><td rowspan="2">제도 개선</td><td>●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 및 반부패 수법사례는 제외, 자구 수정은 제외)</td><td></td><td>40</td><td rowspan="2"></td></tr><tr><td>●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따른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 제정·개정 (국회·의회에 관련 제정·개정안이 계류 중일 경우 50점)</td><td></td><td>55</td></tr><tr><td>공표</td><td>●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td><td></td><td>2</td><td rowspan="2">합 산</td></tr><tr><td>협력</td><td>●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사례 등을 타 공공기관에 발표 등</td><td></td><td>3</td></tr></table>					구분			배점		공통	● 일반의견 제시		20	유 리 한 점 수 중 하 나 합 산	● 감사 참여(동일 감사 건은 1회로 인정) (1회 10점, 2회 15점, 3회 20점, 4회 이상 30점)		30	● 사회적 이슈(언론보도, 집단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에 대한 특별 감사 요구 (그 외 특별감사 요구는 20점)		30	●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하여 감사 실시 (그 외 특별감사 실시는 35점)		45	●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이 참여하여 감사 실시		55	제도 개선	●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 및 반부패 수법사례는 제외, 자구 수정은 제외)		40		●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따른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 제정·개정 (국회·의회에 관련 제정·개정안이 계류 중일 경우 50점)		55	공표	●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2	합 산	협력	●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사례 등을 타 공공기관에 발표 등		3
구분			배점																																								
공통	● 일반의견 제시		20	유 리 한 점 수 중 하 나 합 산																																							
	● 감사 참여(동일 감사 건은 1회로 인정) (1회 10점, 2회 15점, 3회 20점, 4회 이상 30점)		30																																								
	● 사회적 이슈(언론보도, 집단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에 대한 특별 감사 요구 (그 외 특별감사 요구는 20점)		30																																								
	●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하여 감사 실시 (그 외 특별감사 실시는 35점)		45																																								
	●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이 참여하여 감사 실시		55																																								
제도 개선	●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 및 반부패 수법사례는 제외, 자구 수정은 제외)		40																																								
	●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따른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 제정·개정 (국회·의회에 관련 제정·개정안이 계류 중일 경우 50점)		55																																								
공표	●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2	합 산																																							
협력	●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사례 등을 타 공공기관에 발표 등		3																																								
※ 실적 인정 제외(예시)																																											
- 청렴교육, 내부직원 아이디어 평가, 법령 등 당면 규정에 의한 외부위원 심사 등(계약 관련 각종 심의나 제안서 평가 위원 활동 실적 등)																																											
- 본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시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점	100
평가 방법	○ 민간단체와 협력체 구성 및 활동실적(가점, 10)				
	구 분			배점	
				사례당	총점
	대표자 회의 운영			6	6
	캠페인, 청렴행사, 간담회(회의) 등			2	4
	※ 대표자회의 : 다음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기회의나 운영위원회를 말함 1) 민간단체(참여기관의 1/5 이상)를 포함하여, 공기업·지자체·교육청 등 3그룹 이상 구성·참여 2) 운영규정이 있으며 3) 의사결정권자(국장·본부장급 이상)가 참여(부서장 참여 회의는 제외) ※ 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법정지원단체 및 직능단체 제외)				
비고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지표는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제외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노력과 각급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평가																																	
	- 평가대상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의 기관 간 편차를 고려, 양 실적 간 배점을 차등화하여 평가																																	
	<table><tr><th rowspan="3">평가대상 세부과제수</th><th colspan="3">배점</th><th rowspan="3">합계</th></tr><tr><th rowspan="2">①권고과제 이행</th><th colspan="2">②자율적 제도개선</th></tr><tr><th>배점</th><th>제출건수</th></tr><tr><td>0개</td><td>0점</td><td>100점</td><td>자율적 제도개선(2건) C-2-2 반부패 시책(2건)</td><td>100점</td></tr><tr><td>1~9개</td><td>10점</td><td>90점</td><td>자율적 제도개선(2건)</td><td>100점</td></tr><tr><td>10~19개</td><td>20점</td><td>80점</td><td>C-2-2 반부패 시책(1건)</td><td>100점</td></tr><tr><td>20개 이상</td><td>30점</td><td>70점</td><td>자율적 제도개선(1건) C-2-2 반부패 시책(1건)</td><td>100점</td></tr></table>				평가대상 세부과제수	배점			합계	①권고과제 이행	②자율적 제도개선		배점	제출건수	0개	0점	100점	자율적 제도개선(2건) C-2-2 반부패 시책(2건)	100점	1~9개	10점	90점	자율적 제도개선(2건)	100점	10~19개	20점	80점	C-2-2 반부패 시책(1건)	100점	20개 이상	30점	70점	자율적 제도개선(1건) C-2-2 반부패 시책(1건)	100점
	평가대상 세부과제수	배점				합계																												
		①권고과제 이행	②자율적 제도개선																															
			배점	제출건수																														
	0개	0점	100점	자율적 제도개선(2건) C-2-2 반부패 시책(2건)	100점																													
	1~9개	10점	90점	자율적 제도개선(2건)	100점																													
	10~19개	20점	80점	C-2-2 반부패 시책(1건)	100점																													
	20개 이상	30점	70점	자율적 제도개선(1건) C-2-2 반부패 시책(1건)	100점																													
※ 세부과제에는 전년도 평가 시 미이행과제가 포함(별도통보 예정)																																		
※ 평가대상 세부과제수에 따라 기관별 자율적 제도개선 제출건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제도개선총괄과에 총 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확인 필요																																		
①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 권익위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text{이행실적} = \frac{\text{이행완료 세부과제}}{\text{평가대상 세부과제}} \times (\text{해당기관 배점})$																																		
②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법·제도(법령, 사규 등)·시스템상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평가(건당 4페이지 작성)																																		
※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 제출건수가 2개인 기관의 경우 2개 과제 각각의 점수를 평균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 점	100
평가 방법 비고	< 주요 부패취약분야 >			
	구 분	주요 부패취약분야		
	중앙행정기관	▪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 준공공영역(공무수행 민간인, 전문자격사, 공익법인 등)의 부패친화적 관행 ▪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 계약, 인·허가, 공사, 예산·회계, 부과·환급 관련 부패 ▪ 인사, 채용 비리 ▪ 사립학교 비리 ▪ 촌지수수 관행 ▪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공직유관단체	▪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 방만 경영(업무추진비 남용, 복지비 과다지출 등) ▪ 계약비리, 영업소 등 수익사업 운영 과정 비리 ▪ 인사, 채용 비리, 자회사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 ▪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20
	▪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20
	▪ 예산·인력 등 동원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및 제도개선 내용의 효과성·지속성			40
▪ 타기관 등에 적용가능성 등 파급효과			20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이행(가점, 5)											
	※ 중앙행정기관 1 그룹 해당 지표											
	- 권익위의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을 통한 해당기관의 부패유발요인 개선 노력 평가											
	① 개선권고 건수 5건 이상인 기관											
	▪ 이행률 = $\frac{\text{당해 기관의 이행 개선권고 수}}{\text{당해 기관 전체 개선권고 수}} \times 100$											
	<table><tr><th>이행률</th><th>배점</th></tr><tr><td>75% 이상</td><td>5</td></tr><tr><td>75% 미만 ~ 60% 이상</td><td>3</td></tr><tr><td>60% 미만 ~ 50% 이상</td><td>1</td></tr></table>				이행률	배점	75% 이상	5	75% 미만 ~ 60% 이상	3	60% 미만 ~ 50% 이상	1
	이행률	배점										
	75% 이상	5										
	75% 미만 ~ 60% 이상	3										
	60% 미만 ~ 50% 이상	1										
※ '15~16년도 제·개정법령 개선권고를 대상으로 평가. 단, 16년도의 경우 법률은 제외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행여부만 평가(금년도 평가과제 별도 승부)												
☞ 이행여부는 최종 공포된 법령안에 개선권고 취지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판단(단, 법제심사 확정안, 차관·국무회의 상정안 제출 등도 인정)												
☞ 소관 부처에서 개선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 추진하였으나, 외생적 요인(입법철회, 법제심사 중 삭제, 국회 심의 중 삭제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												
② 개선권고 건수가 4건 이하인 기관												
▪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법령 등(훈령, 고시, 예규, 지침 등 포함)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한 실적 평가(기관별 세부평가서 2건 제출)												
※ 세부평가서는 서로 다른 주제를 대상으로, 3페이지 이상 작성												
☞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11개 부패영향평가 기준과 관련이 없는 경우,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 및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평가항목에 중복 제출된 과제인 경우 불인정												
<table><tr><th>구분</th><th>배점</th></tr><tr><td>제출 건 모두 인정</td><td>5</td></tr><tr><td>제출 건 중 1건만 인정</td><td>3</td></tr><tr><td>제출 건 모두 불인정</td><td>1</td></tr></table>				구분	배점	제출 건 모두 인정	5	제출 건 중 1건만 인정	3	제출 건 모두 불인정	1	
구분	배점											
제출 건 모두 인정	5											
제출 건 중 1건만 인정	3											
제출 건 모두 불인정	1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이행(가점, 5) ※ <u>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u> 해당 지표 ▪ $\frac{\text{당해 기관의 이행 과제수}}{\text{당해 기관 전체 개선 권고 과제수}} \times 5$ <이행 과제 수 인정 기준(1건당)> <table><tr><td>▪ 의회 이송 ~ 공포</td><td>1건</td></tr><tr><td>▪ 의회 제출 ~ 의회 심의·의결 시</td><td>0.7건</td></tr><tr><td>▪ 내부방침 확정 ~ 의회 제출 전</td><td>0.3건</td></tr></table> ※ 개선과제 각 이행실적별 증빙문서(공문 등) 첨부 시에만 점수 인정, <u>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 6개월 이상 의회 보류중인 사안도 이행한 것으로 인정</u> (단, '17년 개정 추진분만 해당) ☞ 개선과제 각 이행실적별 증빙문서(공문, 개정조례 등) 첨부 시에만 점수 인정					▪ 의회 이송 ~ 공포	1건	▪ 의회 제출 ~ 의회 심의·의결 시	0.7건	▪ 내부방침 확정 ~ 의회 제출 전	0.3건				
	▪ 의회 이송 ~ 공포	1건													
	▪ 의회 제출 ~ 의회 심의·의결 시	0.7건													
	▪ 내부방침 확정 ~ 의회 제출 전	0.3건													
	○ 사규 자율평가 개선(가점, 5) ※ <u>공직유관단체</u> 해당 지표 - 해당 기관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주제가 다른 사규 2건 이상 제·개정 완료 시 가점 부여(3점) ※ (인정기준) 자료입력 기간까지 제·개정을 완료(이사회 의결, 기관 홈페이지 게시)한 과제 ☞ 단순 행정절차 개정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과 관련이 없거나,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 및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평가항목에 제출한 과제는 불인정 ※ (증빙방법) 개선과제별 세부평가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규 화면 캡처 파일 (또는 이사회 의결 공문)로 실적 증빙 ☞ '16년도 권익위와 체결한 사규 부패영향평가 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5개 기관은 권고과제 이행완료 증빙자료 제출 시 실적 인정 - 사규 자율평가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제도 교육 이수 시 가점 부여(2점) ※ 교육 일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4월 중 안내 예정 <세부평가기준> <table><tr><td rowspan="2">① 사규 개선</td><td>2건 인정</td><td>3점</td><td rowspan="2">② 교육 이수</td><td>이수</td><td>2점</td></tr><tr><td>1건 인정</td><td>1점</td><td>미이수</td><td>0점</td></tr></table>					① 사규 개선	2건 인정	3점	② 교육 이수	이수	2점	1건 인정	1점	미이수	0점
	① 사규 개선	2건 인정	3점	② 교육 이수	이수		2점								
		1건 인정	1점		미이수	0점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기관별 행동강령 내실화(20) - 기관별 행동강령에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6.9.27.) 내용의 반영 여부 평가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20		10		0			
	② 외부강의등 제도 운영(40) - 외부강의등의 신고 현황 점검							
	구 분					배점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과 중복 인정 불가					20		
	▪ 외부강의등 실태분석 및 기관장 보고 * 기관장에게 정식공문으로 보고					20		
	③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40)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7회 이상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40		35	30	25	20	15	10
▷ 舊(16) 중앙행정기관Ⅲ 그룹(7개)·공공기관Ⅴ 그룹								
4회 이상		3회		2회		1회		
40		30		20		10		
▷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 그룹								
4회 이상		3회		2회		1회		
40		30		20		10		
비고	- (외부강의등 제도 운영) 기관장과 감사가 상호 완전 독립되어 견제하는 시스템인 경우 기관장 대신 '감사'에 대해서 보고 가능 ※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관만 인정 - (지도·점검 실적) 他 복무점검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행동강령 위반점검(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공문 및 첨부문서 포함)를 모두 제출해야 인정 ※ 기관별로 실시하는 단순 보안점검은 불인정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부패행위자 자체 적발(60)																			
	- 정원대비 자체적발 실적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점수* · $\frac{\text{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sqrt{\text{기관 정원}}} \times 100$																			
	<table><tr><td>구 분</td><td>배점</td><td>구 분</td><td>배점</td></tr><tr><td>30% 이상</td><td>60</td><td>7% 이상</td><td>48</td></tr><tr><td>16% 이상</td><td>56</td><td>7% 미만</td><td>44</td></tr><tr><td>10% 이상</td><td>52</td><td>0%</td><td>40</td></tr></table>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30% 이상	60	7% 이상	48	16% 이상	56	7% 미만	44	10% 이상	52	0%	40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30% 이상	60	7% 이상	48																	
16% 이상	56	7% 미만	44																	
10% 이상	52	0%	40																	
※ 기관별 자체적발 강화 노력이 중점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지표 설정																				
<div><p style="text-align: center;">《 *자체적발 점수 산식 》</p><p>· 가중 계산된 자체적발 처분 건수(인원수)의 총합</p><p>※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종류에 따른 가중치</p><p>- 징계(×3), 처분(×1)</p><p>[예시] (견책 2명×3)+(훈계 3명×1)=9</p><p>※ 음주운전, 성희롱, 복무 위반 및 업무과실 등 단순 행위 제외</p></div>																				
평가 방법	②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40)																			
	-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례에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실제 적용했는지 여부를 평가																			
	<table><tr><td>구분</td><td>적용 기준*</td></tr><tr><td>공무원</td><td>‘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td></tr><tr><td>공직유관단체 임직원</td><td>‘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4(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td></tr></table>				구분	적용 기준*	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4(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구분	적용 기준*																		
	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4(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감경 사례 1건 당 4점 감점																				
※ 금품, 향응 수수 관련 부패사건에만 해당(공금횡령 등 제외) ※ 부패사건이 없는 기관은 만점																				
비 고	1. ①② 대상기간 : ‘16. 11. 1 ~ ‘17. 10. 31. 기간 내 처분 2. 처분유형 : 부패행위 처분확정일 기준 (당연퇴직,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신분상 처분으로, 단순 시정조치 등 제외)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탁금지 제도운영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청탁금지법 교육 활성화(40)				
	- 소속기관 포함 전 직원 대상 1회 이상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실시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청탁금지법 교육 이수실적(간부) ※ 간부 직원 교육 이수비율		80% 이상 교육실시	10	
			80% 미만 교육실시	0	
	② 청탁금지법 교육 이수실적(직원) ※ 전 직원(소속기관 포함) 교육 이수비율		80% 이상 교육실시	30	
			60% 이상 교육실시	20	
			40% 이상 교육실시	10	
			40% 미만 교육실시	0	
	※ 청탁금지법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공문)로 실적증빙				
	②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40)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를 위한 규정 유·무,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방법 홈페이지 안내 등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여부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 규정 ※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정 또는 준용 규정 유·무		이 행	20	
			미 이 행	0	
	② 공무수행사인 외부 공개 ※ 외부 홈페이지에 기관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여부		이 행	10	
			미 이 행	0	
	③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이 행	5	
			미 이 행	0	
	④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 외부 홈페이지에 위반행위 신고방법 안내 유·무		이 행	5	
			미 이 행	0	
	③ 청탁금지법 관련 변화사례 발굴·운영(20)				
	- 각급 기관의 부정청탁·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자율시책 및 법 시행으로 공직자들이 체감하는 우수 변화사례를 평가하여 적합성, 파급효과 등에 따라 점수 부여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20		15	10	5	0
※ 기관별로 최대 5건 제출, 제출된 시책·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별도 공문을 통해 취합 예정, 청탁금지법과 관련 없는 시책·사례 및 외부 권고에 따른 단순 이행사례는 제출 제외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청렴교육 강사 양성(20) - 기관 규모별 ‘청렴교육 강사 양성과정’ 이수 실적			
	기관 정원		청렴교육 강사 수	
	6,000명 이상		5명	
	3,000명 이상 ~ 6,000명 미만		4명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2명	
	1,000명 미만		1명	
	※ ‘16~’17년도에 청렴연수원의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이수한 강사 수를 합한 실적			
	※ 청렴연수원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자가 평가기간 내 퇴직한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			
	② 청렴교육 강사 활용(30)			
	구 분		배점	
3회 이상 활용		30		
2회 활용		20		
1회 활용		10		
실적 없음		0		
※ 청렴교육 강사 활용 실적 인정 기준(1회 기준)				
-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기본강사 및 전문강사) 또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진행한 경우(합산 가능)				
③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50)				
■ $\frac{\text{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text{고위공직자 정원}} \times 100$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90% 이상		50		
80%이상~90%미만		44		
70%이상~80%미만		38		
60%이상~70%미만		32		
50%이상~60%미만		26		
40%이상~50%미만		20		
30%이상~40%미만		14		
20%이상~30%미만		8		
20% 미만		0		
※ (국공립대학) 학과장 이상 교원 청렴교육 이수(50)				
■ $\frac{\text{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text{학과장 이상 교원 인원}} \times 100$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50% 이상		50		
40%이상~50%미만		40		
30%이상~40%미만		30		
20%이상~30%미만		20		
10%이상~20%미만		10		
10% 미만		0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평가 방법	※ (공공의료) 전문의 이상 의사 청렴교육 이수(50)																			
	■ $\frac{\text{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text{전문의 이상 의사 인원}} \times 100$																			
	* 소수점 절삭																			
	<table><tr><td>구 분</td><td>배점</td><td>구 분</td><td>배점</td></tr><tr><td>50% 이상</td><td>50</td><td>20%이상~30%미만</td><td>20</td></tr><tr><td>40%이상~50%미만</td><td>40</td><td>10%이상~20%미만</td><td>10</td></tr><tr><td>30%이상~40%미만</td><td>30</td><td>10% 미만</td><td>0</td></tr></table>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50	20%이상~30%미만	20	40%이상~50%미만	40	10%이상~20%미만	10	30%이상~40%미만	30	10% 미만	0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50	20%이상~30%미만	20																
	40%이상~50%미만	40	10%이상~20%미만	10																
	30%이상~40%미만	30	10% 미만	0																
	○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가점, 10)																			
	<table><tr><td>세부 평가지표</td><td>배점</td></tr><tr><td>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td><td>10</td></tr></table>				세부 평가지표	배점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	10												
세부 평가지표	배점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	10																			
○ 강의 경연대회 참여(가점, 5)																				
<table><tr><td>구 분</td><td>배점</td></tr><tr><td>① 강의 경연대회 참여 및 본선 진출</td><td>5</td></tr><tr><td>② 강의 경연대회 참여</td><td>3</td></tr></table>				구 분	배점	① 강의 경연대회 참여 및 본선 진출	5	② 강의 경연대회 참여	3											
구 분	배점																			
① 강의 경연대회 참여 및 본선 진출	5																			
② 강의 경연대회 참여	3																			
○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과정 반영(가점, 5)																				
-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2주(휴일 포함 12일) 이상 장기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시간 편성 비율(4시간 이상)																				
■ $\frac{\text{4시간 이상 청렴교육 편성 과정 수}}{\text{2주 이상 장기 교육과정 수}} \times 100$																				
* 소수점 절삭																				
<table><tr><td>구 분</td><td>배점</td><td>구 분</td><td>배점</td></tr><tr><td>90% 이상</td><td>5</td><td>30%이상~50%미만</td><td>2</td></tr><tr><td>70%이상~90%미만</td><td>4</td><td>10%이상~30%미만</td><td>1</td></tr><tr><td>50%이상~70%미만</td><td>3</td><td>10% 미만</td><td>0</td></tr></table>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5	30%이상~50%미만	2	70%이상~90%미만	4	10%이상~30%미만	1	50%이상~70%미만	3	10% 미만	0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5	30%이상~50%미만	2																	
70%이상~90%미만	4	10%이상~30%미만	1																	
50%이상~70%미만	3	10% 미만	0																	
※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일 이후 시작되거나 통보일 기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만 평가																				
※ 대상 기관 : 행정부(독립 훈련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소속 교육기관), 공직 유관단체(소속 교육기관)																				
※ 어학 교육, 대국민교육 과정, 사이버 교육 과정 제외																				
※ 포괄 범위가 넓어 청렴교육으로 인정하기 힘든 교육은 실적 불인정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비고	<p>-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평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 인원 산정 시 직제상 정원을 적용(2017.10.31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원이 정원과 상이할 경우 현원 기준으로 실적보고서 작성 ·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중간관리자(부서장급 및 팀장급)를 포함하여 교육 하여도 인정(청렴유적지 방문 및 사이버 교육은 인정 불가) ·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교육인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연수원 주관 기관대상 청렴교육에 선정된 기관의 경우 교육 당일 고위공직자 80% 이상이 참여할 경우 만점 부여 -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고위직만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도 인정되나, 관리자급, 간부급(팀·과·부장급) 이상 내부강사를 활용한 교육 실적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교육 강사 양성 과정 교육 이수자는 관리자급(간부급)이 아닌 경우에도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의 강사로 활용해도 실적 인정 · 고위공직자가 타 기관(소속, 산하기관 대상 강의 포함)에 청렴교육 출강 시 강의시간의 두배를 청렴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공직가치 제외)가 포함 되어야 함 ※ 초·중·고등학교장 대상 교육은 소속 교육청에서 진행 협조 <p>- 고위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정원 산정 시 포함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 ※ 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 : 4급 이상 ※ 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 ※ 유치원 및 학교 장 포함 ·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정원 산정시 포함 <p>- 전문의(학과장) 이상 의사(교원) 이수 실적 평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방법 : 직원 워크숍, 연찬회,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한 집합교육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교육은 인정 불가 ※ 교육계획의 일정 또는 행사명에 청렴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 되어 있어야 실적 인정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합산 가능)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 내실화(20)									
	- 지침 상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 여부 평가									
	<table><tr><td>내용 충실*</td><td>내용 부실</td><td>미제정</td></tr><tr><td>20</td><td>10</td><td>0</td></tr></table>				내용 충실*	내용 부실	미제정	20	10	0
	내용 충실*	내용 부실	미제정							
	20	10	0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16.4.20 배포)의 붙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안)」, 「표준조례(안)」 참고('17.4월초 재 안내)									
	※ 8월경 실태조사 공문 시행 시 운영지침 제출 요청(8월말까지 개정작업 완료)									
	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15)									
	- 기본 2회 이상 교육 실시 권장									
	<table><tr><td>우수</td><td>보통</td><td>미실시</td></tr><tr><td>15</td><td>10</td><td>0</td></tr></table>				우수	보통	미실시	15	10	0
우수	보통	미실시								
15	10	0								
※ 교육 시행 충실도 등 노력도에 따라 가감 (우수사례) 소속 직원 교육 외 관내 기업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 교육 실시 등										
③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15)										
- 기관보유 매체에 영상물 표출, 포스터·리플릿 배포, 공익신고 상시 배너 연계,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 기관지 홍보 등										
<table><tr><td>우수</td><td>보통</td><td>미실시</td></tr><tr><td>15</td><td>10</td><td>0</td></tr></table>				우수	보통	미실시	15	10	0	
우수	보통	미실시								
15	10	0								
※ 매체·장소의 다양성 등 노력도에 따라 가감 (우수사례) 캠페인 및 공모전 실시, 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간담회 개최, 특별 신고기간 운영, 민간 협업 등										

평가영역	B. 실행	평가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과제	3-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배점	100												
평가방법	④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 설치(10)																		
	- 기관 홈페이지(메인면)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상시배너 설치·연계 협조 (10)																		
	<table><tr><td>실적</td><td>1/4분기부터 연계</td><td>2/4분기부터 연계</td><td>3/4분기부터 연계</td><td>4/4분기부터 연계</td><td>미연계</td></tr><tr><td>배점</td><td>10</td><td>8</td><td>6</td><td>4</td><td>0</td></tr></table>						실적	1/4분기부터 연계	2/4분기부터 연계	3/4분기부터 연계	4/4분기부터 연계	미연계	배점	10	8	6	4	0	
	실적	1/4분기부터 연계	2/4분기부터 연계	3/4분기부터 연계	4/4분기부터 연계	미연계													
	배점	10	8	6	4	0													
	※ 홈페이지 관리부서에 보낸 게시요청 공문과 프린트스크린 사진(날짜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화면을 전체 캡처) 등 증빙자료를 추후 공문 공지시('17. 10월 경) 일괄 제출																		
	⑤ 부패신고 활성화 교육(20)																		
	-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계약업체, 기관 복지 업무담당자,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 잠재적 내부 신고자 대상 부정수급 사례 및 부패신고 교육 실적																		
	※ 부정수급 사례, 신고자 보호제도 등 집합 교육 1회 실적을 보통으로 평가하며 대상인원 등 파급력, 충실도에 따라 평가 (우수사례) 각급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정 의무교육, 사업설명회 등에 부패 신고 및 보호제도 교육 실시																		
	<table><tr><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실시</td></tr><tr><td>20</td><td>15</td><td>10</td><td>0</td></tr></tabl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실시	20	15	10	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실시																
20	15	10	0																
⑥ 부패신고 활성화 홍보(20)																			
- 기관 자체 홍보매체(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를 이용한 집중신고기간 안내 홍보 등 협조공문 요청에 대한 홍보 실적																			
-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에서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보호·보상 리플릿 배포																			
※ 집중신고기간 안내 등 홍보 협조에 따라 온·오프라인별 각 1개 매체 홍보를 보통으로 평가하며 대상 인원, 매체 다양성 등 홍보의 파급력에 따라 평가 (우수사례) 업체 관계자 대상 사업설명회 시 신고 관련 리플릿 등 배포																			
<table><tr><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실시</td></tr><tr><td>20</td><td>15</td><td>10</td><td>0</td></tr></tabl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실시	20	15	10	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실시																
20	15	10	0																
⑦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인사규정 등 채용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반영(가점, 5)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1. 청렴 개선 효과										
단위 과제	청렴 개선 효과			배점	100								
평가 방법	1-1 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60) - 기관들이 자신들의 1년에 걸친 청렴활동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사항(4장 이내 작성) <div style="text-align: center;">< 효과성 평가 작성 목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div>① (배경) 기관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div><div>② (창의성) 기관의 1년간 시책운영이 창의적, 혁신적이었는가?</div><div>③ (이해관계자) 시책운영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구였는가?</div><div>④ (장애물) 시책운영의 주요 장애물은 무엇이며,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는가?</div><div>⑤ (결과물) 시책운영의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은 무엇이었는가?</div><div>⑥ (확장성) 시책운영은 지속성이 있는가? 타 기관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가?</div></div>												
	1-2 청렴도 개선 실적 반영(30)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상승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30점▪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24점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하락(유지 포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24점▪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18점 ※ 단, 2017년 종합청렴도 'Ⅱ등급' 이상인 기관은 30점, 미 실시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청렴도 측정에 투입되는 노력 고려)												
	1-3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10)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른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정도(접근 용이성) 평가												
	<table><tr><td>1회 접근, 팝업창 등</td><td>2회</td><td>3회</td><td>4회 이상</td></tr><tr><td>10</td><td>8</td><td>6</td><td>4</td></tr></table>					1회 접근, 팝업창 등	2회	3회	4회 이상	10	8	6	4
	1회 접근, 팝업창 등	2회	3회	4회 이상									
10	8	6	4										
-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함 - '16년 청렴도 측정 미 실시 기관은 시책평가 결과 공개만 평가 ※ 17.4.14.까지 공문으로 제출한 자료로 평가 예정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100
평가 방법	2-1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실적(20)			
	- 청렴 파트너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업무 컨설팅 등 반부패 청렴업무 협력 실적			
	구 분		배점	
	▪ 청렴업무 컨설팅 ▪ 실무자간 업무회의 등		사례당 10	
	▪ 실·국장 이상 고위직 주관 회의		사례당 4	
	▪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사례당 2	
	▪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0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인정 기준			
	-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1개 사례는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함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				
▪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청렴수준 제고 노력을 위한 협력활동 전개				
- 반부패 시책 추진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청렴업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				
- 미흡기관의 반부패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부패 추진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				
- 2016년도 평가 결과 1등급·2등급 기관은 평가대상군 구분 없이 2016년도 평가 결과 3등급·4등급·5등급 기관 또는 신규 대상기관을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2016년 협력 결과 1등급·2등급으로 상승한 기관 및 동일하게 1등급·2등급을 유지한 경우에는 신규기관과 적극적인 자율협력 전개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100
평가 방법	2-2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80) - 각급기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시책 중 효과성이 높은 시책, 타 기관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 등 다른 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시책을 개발·발굴하여 제출(건당 3페이지 작성) - B.2-1.부패취약분야 개선 지표의 제도개선 평가대상 세부과제수가 0개인 기관은 2건, 1개 이상인 기관은 1건 제출 ※ 제출건수가 2개인 기관의 경우 2개 과제 각각의 점수를 평균(1건만 제출할 경우 40점 만점으로 평가)			
	< 반부패 시책 추진 10대 분야 >			
	① 기관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효과적 관리 ② 고위직의 청렴성, 책임성 확보 방안 ③ 업무 수행과정 전반에 이해충돌장치 마련 ④ 계약, 예산, 인사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⑤ 기관장·고위직·직원·외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청렴 추진체계 ⑥ 청탁금지제도 운영 ⑦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 운영 ⑧ 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⑨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를 통한 부패 통제 ⑩ 기타 청렴문화 확산 노력 등			
	< 반부패 시책 개발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10	
	▪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20	
	▪ 예산·인력 등 동원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및 제도 개선 내용의 효과성·지속성		20	
	▪ 타기관 등에 적용가능성 등 파급효과		30	
	※ 반부패 우수 시책으로 사례가 선정될 경우 평가 시 우대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100	
평가 방법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점, 5)				
	- ‘청렴컨설팅’ 참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렴컨설팅’이란 청렴도 미흡기관을 선정, 자체 청렴실천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시책				
	-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성과평가단에서 컨설팅 대상기관별 노력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 청렴 클러스터 활동(가점, 10)				
	구분			배점	최대
	▪ 청렴 클러스터 회의 개최(5개 기관 이상 참여)			사례당 1	3
	▪ 지역별 청렴문화 실천운동			3~7	7
	※ 참여기관, 프로그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				
	※ 우수활동사례 위주로 제출				
(인정예시)					
- 권익위 주관 청렴 클러스터 회의 및 청렴 클러스터 참여 기관 간 회의 개최·참석					
- 지역청렴문화 실천운동 : 지역의 공직유관단체, 협력사,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을 통한 축제,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문화 프로그램 진행(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참여할수록, 많은 기관이 참여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인정제외)					
- 타 기관 주관 청렴 행사에 별도의 역할 없이 단순 참석하는 경우					
- 용역, 평가, 심사, 강의, 자문 활동 실적 등은 제외					
- 본부(청·사)에서 주관하여 같은 프로그램을 지사 및 지역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1개 사례로만 인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1. 부패사건 외부 적발
단위 과제	부패사건 외부 적발(최대 5점 감점)		
평가 방법	○ 부패사건 외부적발 현황 - 2017년도 청렴도 측정 시 활용된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 현황자료 점수 등을 적용		

(심사기획과 등 6개 부서)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최대 5점 감점)		
평가 방법	○ 부패·행동강령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자·협조자 보호규정 위반		
	구 분(건당)		배점
	▪ 신고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등 불이익조치 발생		-0.2
	▪ 신고자·협조자의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0.2
	▪ 신고자·협조자 색출(시도) 및 공개		-0.2
	○ 부패·행동강령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자·협조자 보호관련 법적 조치 미이행		
	구 분(건당)		배점
	▪ 신분보장조치 요구 불이행		-0.2
	▪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요구 불이행		-0.2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최대 1점 감점)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 조치 여부		
	구 분(건당)		배점
	① 채용된 비위면직자 해임 요구 불이행		-0.2
	② 채용된 비위면직자 고발 요구 불이행		-0.2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평가 방법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table><tr><th>구 분</th><th>위반 사항(건당)</th><th>배점</th></tr><tr><td rowspan="3">비위면직자 관리기관</td><td>비위면직자 명단 미제출</td><td>-0.1</td></tr><tr><td>취업제한 안내 누락*</td><td>-0.1</td></tr><tr><td>취업제한 위반 여부 검토 부실**</td><td>-0.1</td></tr></table>			구 분	위반 사항(건당)	배점	비위면직자 관리기관	비위면직자 명단 미제출	-0.1	취업제한 안내 누락*	-0.1	취업제한 위반 여부 검토 부실**	-0.1															
	구 분	위반 사항(건당)	배점																									
	비위면직자 관리기관	비위면직자 명단 미제출	-0.1																									
		취업제한 안내 누락*	-0.1																									
		취업제한 위반 여부 검토 부실**	-0.1																									
	*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파면·해임 등 면직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별도 요청 시 증빙서류(수령증 사본, 등기발송 기록 등)를 제출																											
	**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취업제한 검토과정의 부실사례를 확인한 경우 (예: 업무관련성의 형식적·온정적 판단, 판단근거 미확보 등)																											
	○ 부패·행동강령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 사건처리 관련 업무처리 미흡 (최대 1점 감점)																											
	<table><tr><th colspan="2">구 분(건당)</th><th>배점</th></tr><tr><td rowspan="3">신고 조사 및 실태 점검 비협조</td><td>▪ 신고 및 보호·보상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지연 또는 거부</td><td>-0.1</td></tr><tr><td>▪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점검 자료제출 지연 또는 거부</td><td>-0.1</td></tr><tr><td>▪ 출석 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td><td>-0.1</td></tr><tr><td rowspan="2">이첩(송부 등 포함) 후속조치 등 미흡</td><td>▪ 이첩(송부, 행동강령 위반 통보 포함)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및 후속조치 미흡, 임의적 재이첩</td><td>-0.1</td></tr><tr><td>▪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미이행</td><td>-0.1</td></tr><tr><td>실태점검(조사) 결 과 요구사항 등 미 이행</td><td>▪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권익위 의견·통보·요구(권고)사항 등 미이행</td><td>-0.1</td></tr><tr><td rowspan="3">제도 및 통계 관련</td><td>▪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관련 시정권고 사항 불이행</td><td>-0.05</td></tr><tr><td>▪ 공익신고접수·처리현황,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지연 및 내용부실*</td><td>-0.05</td></tr><tr><td>▪ 공익신고 관련 제도개선 및 공동조사 비협조</td><td>-0.05</td></tr></table>			구 분(건당)		배점	신고 조사 및 실태 점검 비협조	▪ 신고 및 보호·보상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지연 또는 거부	-0.1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점검 자료제출 지연 또는 거부	-0.1	▪ 출석 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0.1	이첩(송부 등 포함) 후속조치 등 미흡	▪ 이첩(송부, 행동강령 위반 통보 포함)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및 후속조치 미흡, 임의적 재이첩	-0.1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미이행	-0.1	실태점검(조사) 결 과 요구사항 등 미 이행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권익위 의견·통보·요구(권고)사항 등 미이행	-0.1	제도 및 통계 관련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관련 시정권고 사항 불이행	-0.05	▪ 공익신고접수·처리현황,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지연 및 내용부실*	-0.05	▪ 공익신고 관련 제도개선 및 공동조사 비협조	-0.05
	구 분(건당)		배점																									
	신고 조사 및 실태 점검 비협조	▪ 신고 및 보호·보상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지연 또는 거부	-0.1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점검 자료제출 지연 또는 거부	-0.1																									
		▪ 출석 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0.1																									
	이첩(송부 등 포함) 후속조치 등 미흡	▪ 이첩(송부, 행동강령 위반 통보 포함)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및 후속조치 미흡, 임의적 재이첩	-0.1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미이행		-0.1																										
실태점검(조사) 결 과 요구사항 등 미 이행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권익위 의견·통보·요구(권고)사항 등 미이행	-0.1																										
제도 및 통계 관련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관련 시정권고 사항 불이행	-0.05																										
	▪ 공익신고접수·처리현황,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지연 및 내용부실*	-0.05																										
	▪ 공익신고 관련 제도개선 및 공동조사 비협조	-0.05																										
*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 등 자료는 2월, 8월 경 공문시행을 통해 취합 후 평가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분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평가 방법	○ 부패공직자 등 현황관리 충실도(최대 0.5점 감점)		
	- 부패공직자 등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건당 0.05점 감점		
	· ‘해당없음’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포함		
	구 분(건당)		배점
	▪ 자료입력 누락		-0.05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시 징계의결서 내용(징계이유, 처분이유 등) 없이 표지나 인사발령 공문만을 첨부한 경우 감점		
구 분(건당)		배점	
▪ 징계의결서 미첨부 및 부실 입력		-0.05	
- 자료 입력(제출) 기한 미준수(공문에 기재된 입력기한 기준)			
구 분		배점	
▪ 입력기한 미준수		-0.05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개요 및 협조사항 안내

2017. 3.



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개요 및 협조사항

■ 제도 개요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제91조 등
- 적용대상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준용)의 장 및 그 직원
- 취업제한 및 제재조치
 - **(취업제한 기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
 -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판단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 준용)
 - **(취업제한 기간)**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
 - **(제재조치)**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하여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를 실시하고 있음

※ 위반자 벌칙 조항(법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

구 분	기 준	개 정 사 항
적용 대상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적용대상자 - (확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였던 자
취업제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 퇴직 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 (신설) 부패행위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및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회계·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소속(관할) 부서의 업무	- (확대)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자료요구권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 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 소득세 자료
위반시 제재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

※ 시행일('16. 9. 30.) 이전에 발생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을 따름

■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협조사항

○ 취업제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명단 관리 철저

- 각 기관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를 검토·확인하여 명단 제출(반기별)
- 퇴직자 중 부패행위로 인해 벌금 3백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기관으로 통보된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자로 명단 관리·제출

※ 점검 과정에서 명단의 고의 누락, 자료제출 거부시 시책평가에 불이익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법 제91조제2항)

○ 취업제한 대상자 발생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 징계 및 처분 사유서 등의 서류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붙임1]을 함께 첨부하여 반드시 안내하고, 수령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
- 기존 비위면직자 등에게 안내가 되지 않은 경우 추가 안내 실시

※ 취업제한 위반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 시책평가에 불이익 조치

※ 부패행위가 아닌 행위(예 : 음주운전, 사기·폭력, 성범죄 등)로 퇴직한 경우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므로 취업제한 제도가 안내되지 않도록 주의

〈 부패행위의 개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개정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

-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통해 취업제한제도 안내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검토 철저

- 비위면직자등은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인지여부의 확인을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9조 참조

- 이 경우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의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통지**하여야 함

※ 판단근거 및 검토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권익위 요청시 제출

※ 취업제한 위반 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할 경우 시책평가에 불이익 조치

○ 정관, 인사 규정 등의 **결격사유에 취업제한 규정 반영**

-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 규정을 정관, 인사 규정 등에 결격 사유로 반영

※ 정관,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에 취업제한 규정 반영 시 시책평가에 가점 부여

〈인사 규정 결격 사유 예시〉

제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각 기관 채용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채용후보자의 비위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로미 사이트에서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가능

※ 비위면직자 사전 조회 시스템 세부 방법은 추후 통보 예정

붙임 1.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예시(법 시행 이전, 이후)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홍길동 님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퇴직일('16. 00. 00)부터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향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의 관련성 여부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조치(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 퇴직 전 소속기관(☎ 000-000-0000)

※ 붙임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서식)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홍길동 님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퇴직일('16. 00. 00)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 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취업제한기관 : 법 제82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참조


향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의 관련성 여부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 퇴직 전 소속기관(☎ 000-000-0000)

※ 붙임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서식)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 게임형 청탁금지법의 효과적 교육 -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로 교육효과를 높이는 윤리교육 게임화(Gamification)사례

2017. 3.

 한국동서발전|주|

CONTENTS



윤리교육의 게임화 추진배경



윤리교육의 게임화 프로세스



동서발전 게임형 윤리교육 과정 소개

I. 윤리교육의 게임화 추진배경

한국동서발전주
KOROS EAST-WEST POWER CO., LTD.

'게임화' 정의

- 게임화(Gamification) = Game + -fication(化)의 합성어
- 게임적 사고나 기법(Game mechanics)을 게임 이외의 분야에 활용
※ Gamification Summit(2011년)에서 정식으로 사용된 개념이나 유사 형태들은 2011년 이전부터 존재해왔음(ex. Window 지뢰 찾기 게임)

게임적 사고 및 기법 (Game Mechanic)

- 포인트/마일리지, 레벨, 배지, 스토리
- 베팅, 진행바, 시뮬레이션, 시간제한 등



- 포인트/마일리지 -



- 베팅(上), 시간제한(下) -

게임 이외의 분야

- 홍보 / 마케팅, 고객확보 및 유지
- 업무 프로세스 향상, 교육, 채용 등



- 마케팅 분야 -



- 교육훈련 분야 -

I. 윤리교육의 게임화 추진배경

한국동서발전주
KOROS EAST-WEST POWER CO., LTD.

교육의 '게임화'

- '게임화(Gamification)'는 학습자들의 몰입과 학습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각광받고 있음



60% 이상 학습자들이 경쟁 요소로 인해 동기가 높아진다고 응답



71%의 직장인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80%의 학습자들이 대학/조직이 게임화 된다면 좀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응답



75%의 학습자들이 학습에 게임적 요소들이 포함되면 더 몰입할 수 있다고 응답

교육·훈련의 게임화 필요성 증대

출처 : <http://www.litmos.com>, <http://elearningindustry.com>

I. 윤리교육의 게임화 추진배경

한국동서발전주
KORON EAST-WEST POWER CO., LTD.

<윤리경영 분야> 동서발전 Gamification 활용 사례

클린
마일리지
(Clean
Mileage)

• 청렴윤리 활동에 대해 연중 마일리지를 적립➔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 유도

※ 마일리지 부여 기준 (예시)

- 청렴윤리 활동 참여(50점), 집합교육(20점), 사이버교육(5점/시간)
- 윤리의식 설문조사 참여(5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참여(5점)

게임형
윤리교육

※ 자세한
설명은 뒷장에



- 윤리경영시스템 및 윤리활동 교육 -



- 청탁금지법 및 사내 윤리규범 교육 -

II. 윤리교육의 게임화 프로세스

한국동서발전주
KORON EAST-WEST POWER CO., LTD.

게임화 4F 프로세스



출처 : 강원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발표자료(교육게이미피케이션포럼 대표)

II. 윤리교육의 게임화 프로세스

한국동서발전주
KORER EAST-WEST POWER CO., LTD.

게임화 체험 : >>> 'The 스마트한 윤리담당자를 찾아라!!' <<<



미션

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입장

② "게임형 윤리교육" 보도기사 링크 등록

조건

① 2분 이내, 선착순 00명

② 닉네임 설정 (별 사람 전화번호, 010-7483-4695)

보상

스타벅스 커피 무료쿠폰
- 2매(1~0등), 1매(00~00등)

힌트

#게임형 #윤리교육 #윤리게임
#게이미피케이션

II. 윤리교육의 게임화 프로세스

한국동서발전주
KORER EAST-WEST POWER CO., LTD.

게임화 체험 : >>> 'The 스마트한 윤리담당자를 찾아라!!' <<<



Ⅲ. 동서발전 게임형 윤리교육 과정 소개

한국동서발전주
KOREA EAST-WEST POWER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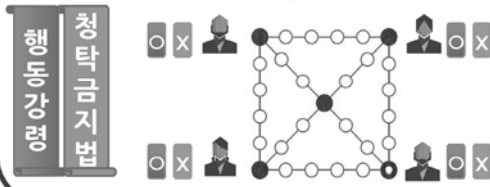
게임1. 나는 윤리실천리더다!



게임2. ※ 관련 영상 시청 청렴 사수를 위한 결투!



게임3. 청렴 전략 윗놀이



게임4. 청탁금지법 배심원 게임



Ⅲ. 동서발전 게임형 윤리교육 과정 소개

한국동서발전주
KOREA EAST-WEST POWER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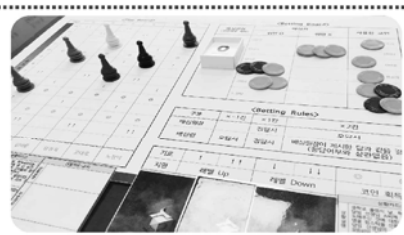
교육과정 운영현황 : 총 19회, 740명 참여

시즌1 (청탁금지법 시행 전)

구분	나는 윤리실천리더다	청렴사수를 위한 결투	청렴 전략윗놀이
교육 목표	EWP 윤리경영시스템 및 윤리실천프로그램 이해	청탁금지법 이해	사례중심 윤리규범 (행동강령, 행동지침), 청탁금지법 이해
교육대상	신입 및 인턴사원	전 직원	전 직원
실 내	1회(59명, 16.1.5.)	8회(210명, 16년 상반기)	7회(279명, 16년 하반기)
적 외	-	1회(42명, ○○시청 등 7개 기관)	1회(65명, ○○공단)

시즌2 (청탁금지법 시행 후)

- 추진배경
 - 위반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 등 교육 필요
 - 임직원 스스로의 법령해석 및 판단 능력 제고 필요
- 추진현황
 - '16.12.09. 시즌2 교육과정 개발 착수
 - '16.12.21. 신입사원(85명)대상 플레이테스트 시행
 - '17.02.25. 강원대학교 산업공학과 김상균 교수 자문



- 플레이테스트 진행중 -

Ⅲ. 동서발전 게임형 윤리교육 과정 소개

한국동서발전주
KORER EAST-WEST POWER CO., LTD.

게임형 윤리교육 기대효과

출처 : <http://interactiveservices.com>



- ◆ 게임적 요소의 학습 동인 제공
- ◆ 자발적 참여로 몰입과 참여 활성화



- ◆ 교육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 ◆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가능



- ◆ 체험형 교육으로 학습내용 체화
- ◆ 교육내용에 대한 기억력 향상



- ◆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제공
- ◆ 윤리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교육평가 설문 결과

※ 조사대상 : '청렴사수를 위한 결투' 수강생 중 177명(총 210명)
조사방법 : 설문지 작성(Likert 5점 척도, 5개 문항)

교육 만족도



청탁금지법 이해도



주관식 설문(긍정)

- 게임을 통해 법령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음
- 참신하고 재미있으며 유익한 교육이었음
- 더욱 재미있는 교육 게임 개발 보급해 줄 것

주관식 설문(보완)

- 게임 룰의 이해가 게임 중 이뤄짐(난이도 조절)
- 캐릭터 능력에 편차가 있음(게임 밸런스 조절)
- 교육시간이 짧았으며, 인센티브 확대 필요함

감사합니다.

문의 : 기획전략처 윤리준법팀 조대근

➢ Tel : 070-5000-1123

➢ Email : dkceo0228@ewp.co.kr

한국동서발전주
KORER EAST-WEST POWER CO., LTD.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탁금지법 운영 사례 -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코레일이 앞장서겠습니다 -

청탁금지법 확산 우수사례



2017. 3. 31.

KORAIL 한국철도공사

발표순서



- Ⅰ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육 콘텐츠
- Ⅱ 맞춤형 사례의 교육 · 홍보
- Ⅲ 외부 고객과의 청렴소통채널 운영

I.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육 콘텐츠

청렴^韓
세상

1 청렴 웹툰

2 청렴 공연



청렴웹툰

1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육 콘텐츠

■ 청렴웹툰 자체 제작



1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육 콘텐츠

■ 웹툰 공유

내 부

외 부



1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육 콘텐츠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국민권익위원회 불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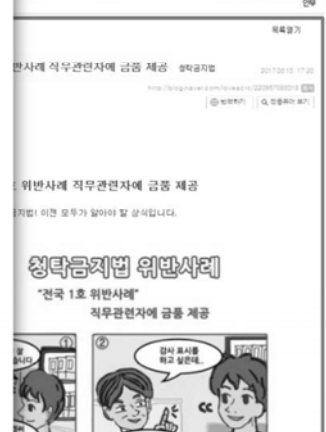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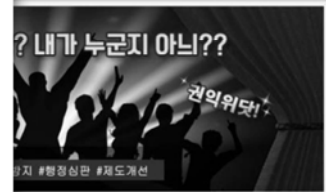
"전국 1호 위반사례"

직무관련자에 금품 제공



청탁금지법! 이런 모두가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 coming soon -

1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육 콘텐츠



청렴 공연(역할극 등)

■ 코레일 청렴아이

- 코레일 입사 3년 미만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청렴아이 선발 · 운영(2015년~)



- 역할극, 뮤지컬 등 즐기는 청렴교육프로그램 구성

2015년	변사또와 포졸들, 청렴 생중계
2016년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2017년	청정남(청렴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 청렴 공연 시행



내부 11회

외부 8회

+ 영상교육

1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육 콘텐츠

■ 청정남 (청렴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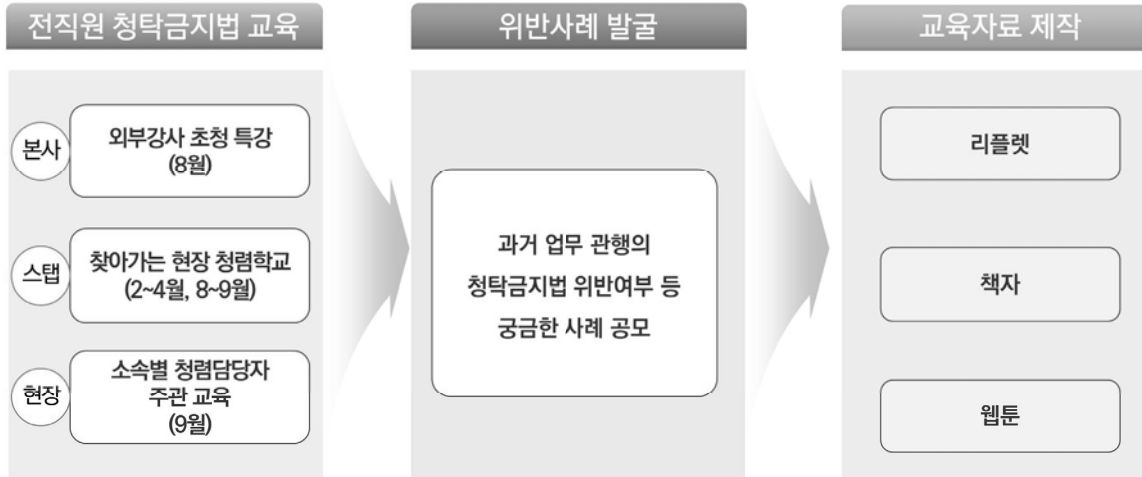
공연 영상 일부 시청(2~3분)

II. 맞춤형 사례의 교육 · 홍보



실제 사례를 반영한 교육자료 제작

■ 사례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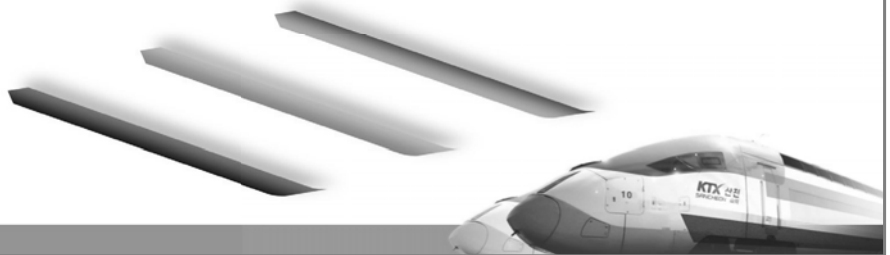
■ 청탁금지법 리플렛 1만부



■ 책자 제작 5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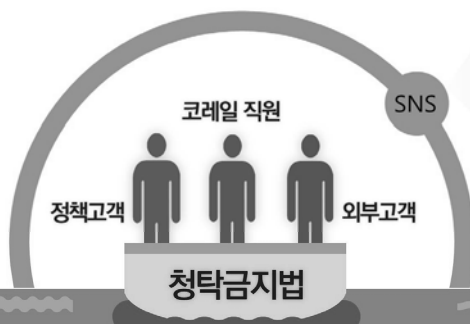
Ⅲ. 외부고객과 청렴소통채널 운영



3 외부고객과 청렴소통채널 운영

[SNS] 청렴코레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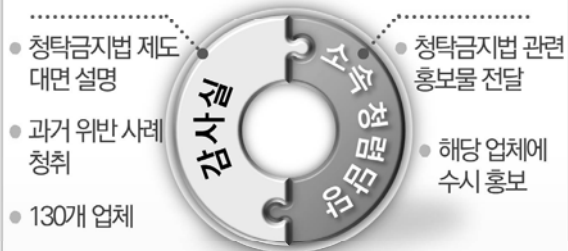
■ SNS를 활용한 외부고객과 상시 청렴소통(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청렴코레일)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홍보

■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홍보(고객사)

- 공사/용역 업체 등 개별 방문으로 법제도 홍보



■ 협력사 청탁금지법 교육

- 간담회 등을 통한 청탁금지법 교육 시행

大田日報

2016년 07월 14일 목요일
020면 사람

코레일 연구원, 협력 납품사 초청 간담회



코레일 연구원은 13일 철도용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납품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코레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붙임자료

〈붙임 1〉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대상기관

① 중앙행정기관 (37)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	---	---	--

② 광역자치단체 (1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	----------------------	-------------------------

③ 기초자치단체 (35)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구미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서울 노원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은평구 서울 동작구 서울 도봉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인천 남구 광주 북구
--	---	---	---	--

④ 시·도 교육청 (16)

서울 교육청 부산 교육청 대구 교육청	인천 교육청 광주 교육청 대전 교육청	울산 교육청 경기 교육청 강원 교육청	충북 교육청 충남 교육청 전북 교육청 전남 교육청	경북 교육청 경남 교육청 세종 교육청
----------------------------	----------------------------	----------------------------	--------------------------------------	----------------------------

⑤ 국·공립대학 (11)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강원대학교
----------------	----------------	----------------	----------------	-------------------------

⑥ 공공의료기관 (12)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	--------------------	-------------------------------	-------------------------------	-------------------

⑦ 공직유관단체 (133)

<p>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메트로 중소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PS(주) 한국산업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은행 한국중부발전(주) 신용보증기금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서부발전(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금융감독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p>	<p>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교통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전KDN(주) 한국전력기술 인천국제공항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마사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거래소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관광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대전도시철도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p>	<p>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경기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시설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울산시설공단 한국연구재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p>	<p>대전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한국장학재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부산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산항만공사 대구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대한체육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해운조합 인천도시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p>
--	---	--	---

〈붙임 2〉

「청렴도 측정」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윤영국 서기관 ☎044-200-7633 adonis2961@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한국소비자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학재단 군인공제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
원현심 사무관 ☎044-200-7638 whs12@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고용노동부 관세청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조달청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방공사(25개)> 강원도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SH공사 울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도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지방공단(6개)> 대구시설관리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방경아 사무관 ☎044-200-7632 bangkyungah@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경찰청 금융위원회 기상청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한국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17)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오경순 사무관 ☎044-200-7634 67120oh@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 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 법제처 병무청 통일부 특허청 환경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24개)>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36)		
박정희 사무관 ☎044-200-7635 rerad243@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교육청>		
	시·도 교육청(17) *교육지원청 포함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46)		
이금희 사무관 ☎044-200-7636 leeeynhyo@korea.kr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기초 시(75)	지방의회(46)
최지애 주무관 ☎044-200-7637 choeja@korea.kr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초 구(69)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홍혜연 주무관 ☎044-200-7630 hyen2@korea.kr		<지방자치단체>	
		기초 군(82)	

〈붙임 3〉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순번	부 서	담당자	연락처	비 고
1	청렴조사평가과	윤영국 서기관	044-200-7633	평가 총괄
		원현심 사무관	044-200-7638	
2	민간협력담당관	박창윤 사무관	044-200-7164	청렴 거버넌스
3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 사무관	044-200-7212	제도 개선
4	부패영향분석과	이진희 주무관	044-200-7655	제·개정 법령 개선
		양정윤 주무관	044-200-7654	자치법규 개선
		이주현 사무관	044-200-7657	사규 개선
5	행동강령과	김수환 주무관	044-200-7677	행동강령
6	청탁금지제도과	윤수성 주무관	044-200-7708	청탁금지제도 운영
7	청렴연수원	박중하 주무관	043-901-6126	청렴교육
8	공익심사정책과	이유경 주무관	044-200-7757	공익신고자 보호
9	심사기획과	안진희 주무관	044-200-7695	부패공직자DB
		김유정 사무관	044-200-7696	비위면직자
		김지연 주무관	044-200-7690	제로미 회원가입
10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백수경 사무관	044-200-7582	복지·보조금 부정 시책추진
11	청렴총괄과	임한나 사무관	044-200-7616	청렴 클러스터
		전진모 사무관	044-200-7623	청렴컨설팅

KT대전인재개발원 건물배치도

